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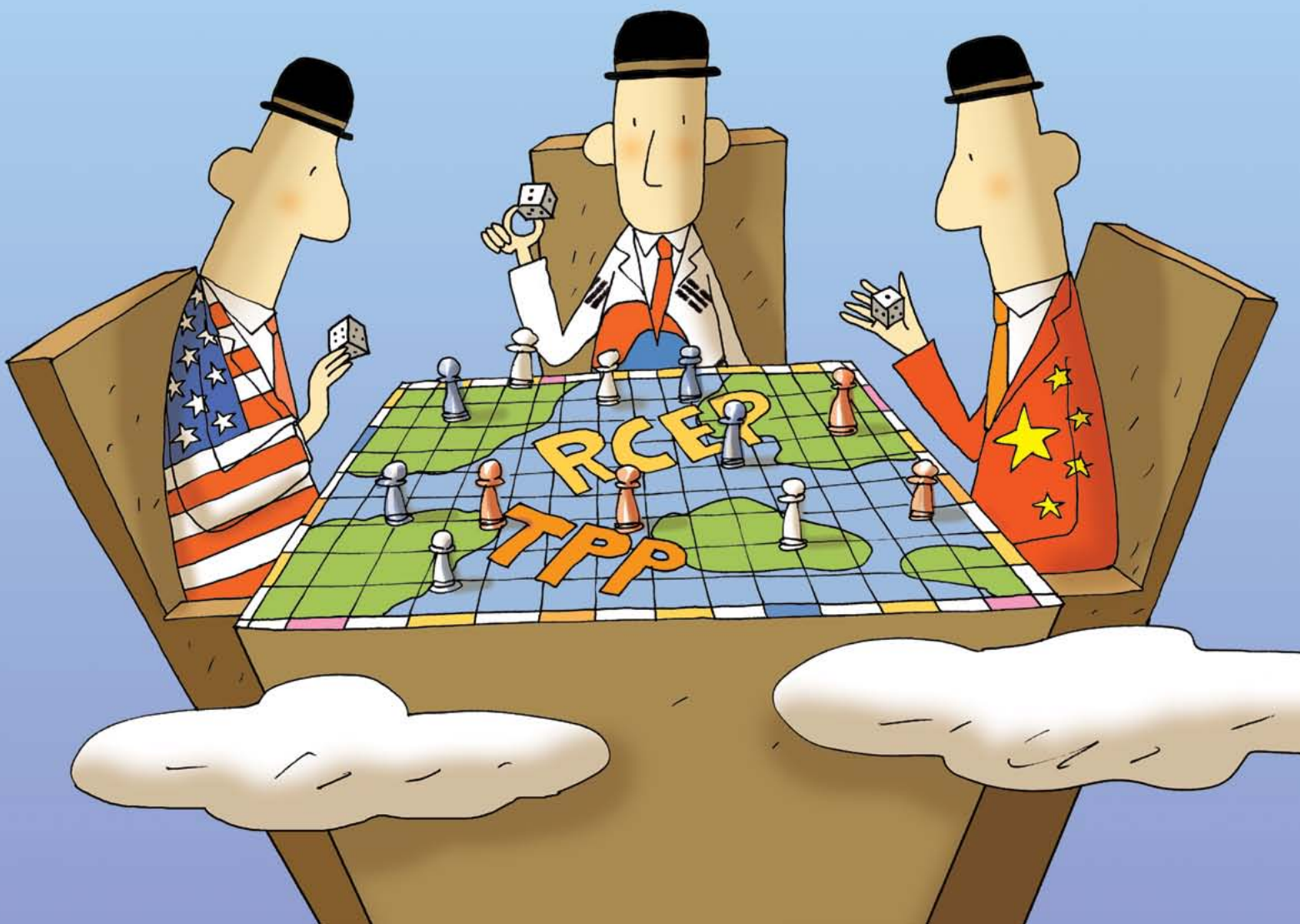
# 함께하는 **FTA**

June 2013 '   
www.ftahub.go.kr ' vol. 13 '



미국·중국의 무역 패권 경쟁과 한국의 선택  
한국, FTA 허브 전략으로 앞서간다

추가 자유화 시동 건 한·아세안 FTA



# 한·아세안 FTA가 업그레이드됩니다.

2007년 6월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대아세안 상품 교역 규모는 2배 이상 증가하며 아세안은 한국의 2번째 교역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협정에 따라 올해부터 추가 자유화 협상이 시작됩니다. 추가 개방을 통해 한·아세안 FTA의 개방 수준은 더욱 높아지고, FTA 활용의 기반이 확대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의 교역은 양적·질적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될 것입니다.



무용사 특가림

◦ FTA 캠페인



## Love KOREA!



양채미  
연세대학교 법학 석사과정

## 외국인 유학생들이 본 한국 그리고 FTA “사랑해요, 한국! 함께해요, FTA!”

한국무역협회 대학생 글로벌 홍보대사 7기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라지브 구마르 씨(Rajiv Kumar, 인도·28)와 양채미 씨(楊采薇, 말레이시아·25)는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글로벌 인재들이다.

차분해 보이는 성격의 구마르 씨는 인도의 명문 델리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학사를 받은 뒤 2008년 성균관대학교에 입학해 석사과정을 마치고 현재 같은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구마르 씨가 한국을 알게 된 것은 인도에 진출한 삼성·LG·포스코 같은 한국 기업들 때문이었다. 집집마다 한국 제품들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관심이 쏠린 것. “최근 한국과 인도가 긴밀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데, 인도에 한국 전문가가 별로 없습니다. 박사급의 심층적인 연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한국행을 결심했죠.”

학부 때부터 한국어를 공부한 구마르 씨는 한국에 대해 “경제 강국이면서도 평화를 사랑하고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가 인상적입니다. 성실하고 애국심도 높아 어떤 위기도 잘 극복하리라고 생각해요”라는 평을 내렸다. 그는 한·인도 CEPA로 경제협력이 강화되어 가고 있는 두 나라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국의 발달된 하드웨어와 인도의 소프트웨어가 합치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다만 경제협력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교류와 이해가 좀 더 늘었으면 좋겠어요.”

20대의 발랄함이 느껴지는 양채미 씨는 동방신기의 ‘왕팬’이다. 한국 아이돌 스타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고등학교 때 한국어를 공부하기도 했다. 이런 한국에 대한 사랑 덕에 말레이시아대학교 재학 중 한국무역협회 초청 특별스터디 참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싱가포르·인도네시아·홍콩·중국·호주 등을 다녔는데, 한국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밥을 먹는 음식문화도 비슷하고, 또 외국인에게 특히 친절할 것에 마음에 들었어요.”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과정인 양 씨는 한국에서 국제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이 꿈이다. 아세안 회원국인 말레이시아는 한·아세안 FTA를 통해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다. “현재 양자 FTA는 없지만, 말레이시아는 향후 한국과의 양자 FTA에 대한 의향이 있어요. 교역과 함께 문화적·인적 교류가 늘어나면 양국은 더욱 밀접한 관계로 발전할 거예요.”

인터뷰를 통해 만난 구마르 씨와 양 씨가 미래 한·인도, 한·말레이시아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글 우종국 기자 사진 서범세 기자



## Together with FTA!



라지브 구마르  
성균관대학교 국제정치학 박사과정



# Contents

01 FTA 캠페인

“사랑해요, 한국! 함께해요, FTA!”

04 인트로 칼럼

급변하는 통상환경과 한국의 전략

커버 스토리

미국·중국의 무역 패권 경쟁과 한국의 선택

한국, FTA 허브 전략으로 앞서간다

06 미국 오바마 정부 2기의 통상정책 방향

세계 경제 지휘하던 미국, 지갑 간간하게 챙기기 시작

08 중국 새 지도부의 FTA 전략 변화의 함의

‘적극적 FTA’ 천명…한·중 FTA 개방도 높아야

10 미·중 통상 패권 경쟁 속 한국의 생존 전략

한국의 FTA 선점 효과 활용과 한·중 FTA 타결이 우선

12 특집 인터뷰: 권평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FTA 활용 지원 강화해 수출 중소기업 키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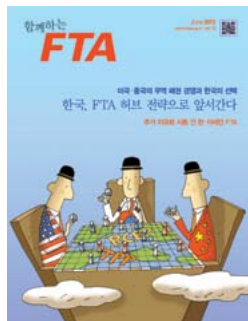
04



12



16



**함께하는 FTA**  
발행일 2013년 6월 3일(통권 13호)  
발행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실  
발행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작협력 한국경제매거진

〈함께하는 FTA〉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저자의 견해로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13 June vol.13

www.ftahub.go.kr

FTA 즐기기

14 경북FTA활용지원센터

전자·섬유·철강의 중심지…FTA 효과 ‘톡톡’

16 사후검증 걱정 끝! FTA사후검증지원센터

사후검증 요청 받으면 바로 전화하세요

18 지상중계1: FTA 활용 터키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FTA는 ‘수단’일 뿐…현지 진출 ‘전략’이 중요

지상중계2: FTA 활용 업종단체 간담회

FTA 활용 애로에 민·관이 공감

스페셜 리포트

추가 자유화 시동 건 한·아세안 FTA

20 한·아세안 FTA의 현황과 성과

대아세안 수출 증가 뚜렷, 수입 증가세는 감소

22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생산기지’에서 ‘소비시장’으로 변화…낮은 개방 수준 더 높아야

FTA 카툰

25 사후검증, 미리 준비하면 걱정 끝!



08



34

FTA 활용

24 FTA 유망 직종: 통관 솔루션 전문가

220개국 통관 절차 ‘빠삭’…FTA로 몸값 상승

26 중소기업 천하: 애플 및 스피커 제조사 신성전자

한·미 FTA로 관세 4.9% 인하…주문량 20% 늘어

28 FTA 활용 팁-미소기준 제대로 활용하기

세번변경기준 적용 시 비장의 카드로 내밀어라

30 실전 FTA 활용 노하우-‘상호대응세율’ 이해하기

한·아세안 FTA에만 있어…아세안 수출 시 재확인해야

32 FTA 이슈 분석-미국의 수입 통관 제도

미국 납세신고서 27번 란에 반드시 ‘KR’ 기재해야

FTA 아카데미

34 알기 쉬운 FTA: FTA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

상품·서비스·투자 외에도

지재권·환경·노동·경쟁정책까지 포함해

FTA 뉴스

36 산업통상자원부·한국무역협회, 첫 통상산업포럼 공동 개최 등

컬처 윈도우

38 할리우드의 이유 있는 한국 사랑

FTA 이벤트

40 창간 1주년 기념 독자 이벤트

급변하는 통상환경과 한국의 전략

## FTA 선점효과 극대화하고, 신흥국 네트워크 강화해야

글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 연구전문위원



앞으로 수년 내로 세계 GDP의 80%를 차지하는 ‘빅3’ FTA가 출범하게 되면 세계 통상질서가 거대 경제블록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될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저성장이 장기화되면서 대외 통상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성장의 축이 선진국에서 신흥경제권으로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거대 경제권 간 FTA가 추진되고 지역경제통합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한편 글로벌 경기침체로 자국 산업 보호정책이 노골화되면서 통상의 쟁점이 관세 인하에서 비관세장벽으로 옮겨가는 양상이다. 반덤핑, 반보조금 등 전통적인 수입규제뿐만 아니라 조세, 경쟁법, 환경,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로 규제가 확대되는 추세다.

대외 통상환경 변화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미국, EU, 일본 등 선진경제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FTA 협상을 추진하는 것이다. 무역 자유화와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다. 미국은 일본 등 태평양 12개국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을, EU와는 한대서양경제동반자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등 아시아 16개국은 이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으로 맞서고 있다. 앞으로 수년 내로 세계 GDP의 80%를 차지하는 ‘빅3’ FTA가 출범하게 되면 세계 통상질서가 거대 경제블록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될 것이다. 3대 FTA에 대한 한국의 수출 비중이 73%에 이르고 있어 거대 블록의 등장은 한국경제에 큰 기회와 도전이 될 것이다.

### TPP·TTIP·RCEP은 국제통상의 새로운 규범 될 것

우선, 3대 FTA로 인해 세계경제 활성화와 무역 확대가 예상된다. 3대 FTA가 출범하면 해당 지역의 경제성장으로 세계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선진국의 국제규범 주도로 신흥국 견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TTIP 체결 시 미국과 EU는 세계 최대 시장을 바탕으로 글로벌 규범 제정자(Rule-Setter)로서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은 중국 등 신흥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환경·노동·경쟁 등 국제규범을 준수하도록 압박해 국제분쟁이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국제통상질서의 변화도 예상된다. 미국이 주도하는 TPP와 중국이 주도하는 RCEP이 회원국 확대 경쟁을 계속하는 가운데, 여기에 참여하기 어려운 브라질 등은 독자적인 길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회원국이 3대 FTA에 중층적으로 가입함으로써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등에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거대 블록의 등장으로 기존의 WTO는 상당 기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 입장에서는 기체결한 FTA의 선점효과가 감소하고 시장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우선 TTIP 등이 체결될 경우 한·미 FTA, 한·EU FTA 협정문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수 있다. TTIP 등에서 한·미/한·EU FTA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투자시장 개방이 이뤄질 경우, 한·미/한·EU FTA 상 ‘미래최혜국대우(MFN)’ 조항에 따라 한국은 미국 또는 EU에 해당 부문의 추가 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 반면, 경쟁국의 FTA 체결 확대로 인해 한·EU, 한·미 FTA 체결의 선점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 TTIP 체결에 따른 선점효과 감소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TPP와 일·EU FTA가 체결되면 한국의 FTA 선점효과는 상당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과 일본은 수출경합도가 높은데다가 특히 주력 수출품목인 전기전자, 자동차, 일반기계 등 3대 품목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RCEP이 체결되면 역내시장에서 한·중·일 기업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중국시장에서는 대만기업뿐 아니라 일본기업도 FTA 효과를 누리게 되어 자동차·전자·화학 등에서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일 3국이 모두 FTA를 체결한 아세안도 투자환경이 개선되면 베트남 등이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더욱 주목받을 것이며, 태국·인도네시아 등 소비시장에서는 한·중·일 기업 간 경쟁이 확대될 전망이다.

### 양적으로 커진 기존 FTA의 내실 다지기 필요해

우리는 이러한 통상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최근의 거대경제권발 통상환경의 변화는 거대경제권의 글로벌 헤게모니 다툼의 성격이 강해 한국과 같은 중견국이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존 FTA의 내실을 다지는 한편 신흥국과의 FTA 네트워크를 확대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급변하는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산업 간 시너지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추진체계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선, 양적으로 크게 확대된 기존 FTA의 내실화에 주력해야 한다. 일본 등 경쟁국이 미국, EU와 체결한 FTA가 발효되기 전에 기존 FTA 선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RCEP, TPP 등 다자간 FTA는 경제적 실리 위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 수출의 50%가 집중된 RCEP 협상에서는 국내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경제효과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TPP의 경우 향후 협상진행 상황과 경제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반면, 성장 가능성이 크고 무역비중이 높은 중국, 중남미, 러시아 등 신흥국으로 FTA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산업 및 자원협력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기업은 3대 FTA 체결로 관세 철폐, 투자자유화, 원산지 규정 통일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역내 생산거점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주요 시장의 경쟁심화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환경, 기술 등 규제리스크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E]





“미국은 새로운 무역협정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진출 기회를  
열어나감과 동시에 불공정무역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통상 집행(trade enforcement)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오바마 정부 2기의 통상정책 방향

## 세계 경제 지휘하던 미국, 지갑 껌껌하게 행하기 시작



일러스트 전희성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지 4개월 남짓 지났다. 여전히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경제회복이기 때문에 통상이슈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지난 1기와는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통상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2기 정부의 통상정책 추진 방향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글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

### 국가수출구상(National Export Initiative)의 적극 추진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통상정책은 국가수출구상을 실현시키는 도구다. 집권 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취임 첫 해를 글로벌 경제이슈에 몰두해야했던 오바마 정부는 2010년 발표한 국가수출구상(NEI: National Export Initiative)을 통해 2014년까지 수출을 두 배로 늘리고, 일자리를 200만 개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또 이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촉진자료회의, 수출촉진조정위원회, 대통령수출협의회 등의 조직을 신설하거나 부활시켰고, 수출지원 체제도 강화했다.

그 결과 2012년 미국의 전체 수출은 1조5,466억 달러에 달해, NEI 실시 이전인 2009년 대비 46.3% 증가했고, 수출과 관련된 새로운 일자리도 120만개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의 경우 제조업(47%), 농업(44%), 서비스업(24%) 모두 크게 증가했다는 점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 TPP, TTIP 동시 추진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2월 연두교서를 통해 범대서양동반자협정(TTIP, 미국과 EU 간의 FTA)과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TPP의 경우 미국은 21세기형 무역협정을 달성하고, 궁극적으로 APEC 국가 간의 FTA인 FTAAP(아태자유무역협정) 체결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 목표 이면에는 급부상하는 아시아 경제에 깊이 관여하고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속내가 담겨져 있다.

2005년 소규모 개방경제인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간에 시작한 TPP 협상은 이후 미국, 호주 등이 연이어 참가하고, 최근에는 일본의 참가가 확정되면서 더욱 규모가 커지게 됐다. 일본의 참여로 TPP 참가국은 전 세계 GDP의 38.2%, 무역의 27.8%를 차지하게 되었다. 미국은 올 10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에서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 주요국간 견해차가 커서 난항이 예상된다.

TTIP의 경우 올 초 깜짝 뉴스처럼 받아들여졌지만,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학자들과 기업들 사이에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2011년 11월 양자 정상회담에서 고위급작업반을 구성해 FTA 추진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올해 초 최종보고서 발표에 이어

양자 정상회담 후 협상개시를 공식 선언하게 된 것이다. 미국과 EU는 2014년 말까지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양측 간에는 보조금, 환경, GMO(유전자변형작물), 지적권 등 상품에 대한 관세양허보다 훨씬 더 다루기 어렵고 서로 입장이 다른 이슈들이 있어 협상 타결까지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TTIP의 체결은 전 세계 경제의 약 절반(46.7%), 무역의 3분의 1(30.4%)을 차지하는 초대형 FTA의 출범을 의미한다. 동시에 TTIP는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표현하고 있는 바 대로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비록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슈들이 있지만, 이 분야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새로운 국제규범이 형성된다면 그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미국과 EU가 당사자인 다른 FTA 협상이나 이미 발효된 FTA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WTO DDA와 같은 다자간 협상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통상 집행의 강화

새로운 무역협정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진출 기회를 열어나감과 동시에 미국은 불공정무역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통상 집행(trade enforcement)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미국은 부처

간통상집행센터(ITEC)를 2012년 초 설치해 외국의 보조금 지급, 지적권 침해 등 불공정행위를 파악해 WTO 제소 등 실질적인 시정 조치를 모색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은 2012년 한 해 동안 5건의 WTO 분쟁 사건을 제소해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미국은 여전히 반덤핑조치, 상계관세조치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비록 새로운 조사 개시 건수와 조치의 발동 건수가 경제위기 이후 감소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절대적인 수치로는 다른 주요 발동국에 비해 적지 않다. 더욱이 지난 해 미국이 취한 반덤핑 조치 건수는 2011년(4건)보다 증가한 7건을 기록해 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무역구제조치는 경기후행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당분간 저장장 기조가 지속되는 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은 지적권 위반에 대한 대응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지적권 위반 상품 조사 건수가 지난 2011년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올해에도 이미 20건에 가까운 조사가 개시된 상태이다. 올해 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특허 전문가가 새로이 임명되었고, 지적권 위반을 다루는 재판정이 새로 설치되는 등의 상황은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한다. [E]



“중국 새 지도부의 FTA 전략 변화로 미루어 향후 중국은 한·중 FTA, 한·중·일 FTA, RCEP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FTA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 중국 새 지도부의 FTA 전략 변화와 합의 ‘적극적 FTA’ 천명... 한·중 FTA 개방도 높여야

지난해 10월 개최된 중국 공산당 대표대회와 금년 3월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총서기와 리커창 총리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했다. 새 지도부의 통치 및 경제운용 철학은 올 가을 개최될 중국 공산당 제18차 3중앙위원 전체회의 이후에 마련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지도부는 당분간 후진타오의 제4세대 지도부가 걸어온 통상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글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장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는 후진타오의 제4세대와는 사뭇 다른 환경에서 출범하였다.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 최대 수출대국, 최대 외환보유국으로 부상하면서 세계경제에 대한 중국의 책임론이 강조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견제 역시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중국 지도부가 통상전략과 FTA 전략에 대한 부분적인 수정을 가하고 있다.

중국은 2006년 12월 상무부가 ‘글로벌 자유무역 네트워크 형성 구상’을 발표한 이후 적극적인 FTA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후진타오 시기의 중국 FTA 정책은 외교안보 목적, 자원 확보 목적, 시장경제지위 획득, 중국위협론의 해소를 위한 주변 중소 규모 국가·지역 우선 원칙 아래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원칙 아래 중국의 FTA 추진 대상 선정기준으로 ①주변국가, ②자원부

국, ③신흥대국, ④각 지역에서 중국과 중대한 정치적 이익을 가진 국가를 중점 선택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 양자·다자 등 동시다발적 FTA 추진

이러한 전략 아래 아세안과의 FTA를 기반으로 하는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유럽 등으로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왔다. 현재 중국은 2013년 4월 아이슬란드와의 FTA 체

결로 10개 국가(또는 경제권)와 FTA를 체결했고, 한국, 호주, 스위스 등 양자간 FTA는 물론 한·중·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간 FTA를 포함하여 8개 국가 및 경제권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새로운 지도부 출범이후 중국의 FTA 전략에도 다소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인 FTA 전략을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지난해 말 천더밍 전 상무부 부장은 “개방으로 개방과 바꾼다(以开放换开放)”는 전략을 추진하고 이후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말 개최된 전국상무공작회의에서는 2013년에는 아이슬랜드, 스위스, 호주, GCC, 한국 등과의 양자 FTA는 물론 RCEP과 한·중·일 등 다자 차원의 FTA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양안 4개 지역(중국 대륙, 대만, 홍콩, 마카오)간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홍콩과의 경제민간화협정(CEPA)을 더욱 강화하고 대만과의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조속히 타결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둘째, 그동안 자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을 주창하여 왔던 중국이 미국 중심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도 다소 개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천더밍은 “RCEP와 TPP

는 경쟁관계가 아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생각에 따라 경제통합을 실현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 3월말 가오하오청 상무부 부장도 “현재의 지역무역협정은 모두 다자규칙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중국은 지역경제협력에 대해 개방적·포용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세계 각 경제주체는 자기에게 적합한 경제일체화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미국이 주도하는 TPP 협상을 여러 선택 가능한 대안으로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다만 일본의 TPP 참여 결정 이후 배타적 블록화에 반대한다는 강한 입장이 보이고 있으며, 동시에 TPP와 미·EU FTA가 다자무역체제를 대체하여 국제규범을 만드는 플랫폼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말 가오하오청 상무부 부장은 “TPP를 포함한 어떠한 FTA 협상도 비배척·포용·투명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다자무역체제나 규범을 보충할 수는 있으나 대체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셋째, 중국이 낮은 수준의 FTA를 주장해 오던 입장에서 벗어나 보다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지난 4월초 동북아 박람회 관련 기자회견에서 천지엔 상무부 부부장은 “상호 이익이 되는 높은 수준의 한·중 FTA의 추진을 희망한

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 한·중 FTA, 향후 중국 통상정책의 바로미터

이러한 중국 새 지도부의 FTA 전략 변화로 미루어 향후 중국은 한·중 FTA, 한·중·일 FTA, RCEP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FTA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천더밍 전임 상무부 부장이 TPP와 미·EU 간 FTA 추진이 중국에 대한 포위와 견제라는 인식아래 “TPP도 하나의 길이 될 수 있고, RCEP과 동아시아 FTA(한·중·일+아세안)도 하나의 길이 될 수 있으며, 마지막에 어떤 길이 더 빠른 길이고 어떤 길로 합쳐질 수 있는 길인지는 상황의 발전을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향후 중국이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있어 속도를 더해 갈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전략 변화를 감안할 때 한국은 중국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FTA 추진 대상국이 될 것이다. 현재 제1단계 협상(기본지침 확정)이 진행 중인 한·중 FTA 추진에 있어 중국의 전략 변화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중 FTA 추진에 있어 높은 수준의 포괄적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협상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높은 수준의 한·중 FTA를 체결할 경우 한·중·일 FTA나 RCEP 협상의 기본 틀을 제공하는 동시에 협상에서 한국의 입지도 강화될 것이다. [K]





미·중 통상 패권 경쟁 속 한국의 생존 전략

## 한국의 FTA 선점 효과 활용과 한·중 FTA 타결이 우선

미국이 추진하는 TPP, TTIP와 중국이 추진하는 RCEP이 체결될 경우 한국이 그간 추진해 온 FTA의 이점이 희석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이 TPP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TPP 참여시 한·일 FTA가 걸림돌이 될 수 있고, 타이밍 상 나중에 참여해도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TPP 참여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글 정인교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일러스트 전희성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총서기가 6월 7~8일 캘리포니아에서 첫 정상회의를 갖는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G2로 설정된 현재의 미·중 관계는 전반적으로 과거 부시 정부보다 우호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부시 정부에서는 대만과 티베트 문제 등으로 사안에 따라 중국과 적대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으나, 현 오바마 정부에서는 사이버 안보 문제 등 중국과의 대립요인이 없지는 않지만 경제난 극복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할 분야도 적지 않다.

### 미·중, 아시아 통상 주도권 경쟁 가속화

통상적으로 미국은 위안화 절상, 무역 역조 시정, 지식재산권 보호 등 통상 현안을 중국에 요구해 왔고, 사안에 따라 덤핑방지 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직접적인 조치를 취해 왔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중국 내 임금이 급속하게 인상되고 환경과 노동에서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국에 투자

했던 기업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유티' 기업이 늘어나면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통상 제재는 악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상당 기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지위를 누려온 미국은 G2로 부상한 중국을 견제하면서 동아시아에서의 경제·통상·안보적 이해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전략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더구나 지난 10여 년 사이 동아시아에서 양자 간 FTA 체결에 이어 범지역적 경제통합체 구

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본보다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미국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미국이 준비한 카드가 바로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이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의 경제협력체 추진 구상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1990년 말 레이시아 마하티르 총리가 동아시아경제협력체(East Asian Economic Caucus) 결성을 제안하자 일본 등의 반대를 유도해 저지했다. 1994년에는 APEC 무역자유화를 의미하는 보고르 목표(Bogor Goal) 선언을 주도했지만, 그 이후 APEC에서 미국의 역할은 줄어들기만 했다. 지역통합보다는 1990년대 당시 동아시아의 구도가 유지되는 것이 미국의 국익과 부합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역주의의 불모지였던 동아시아에서 FTA 체결이 늘어나고 중국이 부상하면서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를 아시아 전략으로 내걸게 된 것이다. 또한 과거와 달리 미국은 글로벌 통상 협상을 추진 중인데, 교착 상황에 빠진 도하개발의제(DDA) 협상을 우회하기 위해 단기간 내 협상 타결이 가능한 국제서비스협상(ISA)을 주도하고, 유럽(EU)과는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TPP와 TTIP 동시 추진이 발표되는 시점에 일본 아베 정부가 TPP 참여를 공식

“ 현재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려운 대내외적 상황을 극복하면서 구축한 FTA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선점 효과를 누리는 것이 우선 과제이고, 협상이 진행 중인 한·중 FTA를 타결하는데 협상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

발표함에 따라 중국은 조조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TPP 등 미국의 거대 지역 무역협정의 추진 내용을 보면 대중국 포위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는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수출 증대를 통한 미국 경제 회생이라는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범지역 거대 무역블록 구축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중국 내수시장 진출은 미국 기업의 관심 사항이란 점에서 보면, 미국은 WTO 가입 조건 이상의 중국 시장 개방을 위해 일정 조건 하에 중국을 TPP 협상에 참여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양국의 입장 조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번 캘리포니아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 한국, TPP보다 FTA 선점 효과 노려야

최근 국내에서는 미국 주도의 TPP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일본에 이어 만약 중국까지 TPP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TPP 참여 필요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다만 주로 거론되는 TPP 참여의 이유가 참여 또는 불참에 따른 단순 비교에 근거한 경우가 많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즉, 남들이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손해 아닌가라는 식의 접근은 경계해야 한다.

TPP 참여 자체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다만 문제는 타이밍이고, 나중에 참여한다 해도 별로 문제될 것은 없는 상황이다. 현

재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려운 대내외적 상황을 극복하면서 구축한 FTA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선점 효과를 누리는 것이 우선 과제이고, 협상이 진행 중인 한·중 FTA를 타결하는데 협상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현재 TPP 협상은 한·미 FTA 협정문을 교재로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으로서는 나중에 참여한다 해도 큰 부담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참여하게 되면 적지 않은 부담을 갖게 된다. 지난 2004년 협상이 중단된 이후 일본의 거듭된 요청에도 한국이 꿈쩍도 안 했던 한·일 자유무역협정을 TPP에서 타결해야 한다.

일본과의 양자 간 협상보다는 TPP라는 다자간 체제에서 협상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으나, TPP에서 시장개방은 기본적으로 다자간 협상이다. 한·일 FTA와 더불어 협상이 잠정 중단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와의 FTA도 양자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뚜렷한 경제적 실익도 보이지 않는 TPP를 일본이 참여한다고 덩달아 나설 이유는 없다. 오히려 이들 미결 상태의 FTA 문제를 한꺼번에 떠안아야 한다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 미국 통상관계자들이 우리 측에 TPP 협상 참여를 권유하고 있지만, TPP 참여 문제는 한숨 돌리고 느긋하게 생각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K]

※TPP 참여에 대한 입장은 필자 개인의 것으로 정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권평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 FTA 활용 지원 강화해 수출 중소기업 키울 것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은 우리나라 무역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다. 무역 투자 및 진흥이 주 역할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해 수출로 이어지도록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무역투자실을 이끌고 있는 권평오 실장은 행시 27회로 1984년 상공부에서 공직을 시작해 30년 가까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지켜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지역경제정책관, 대변인을 거쳐 올해 4월부터 무역투자실의 지휘봉을 잡았다.

글 우종국 기자 사진 김기남 기자

1963년 수출진흥위원회가 시작된 이후 범정부적인 무역 진흥 회의체가 이어져 오다 2009년 이후 중단 되었는데요, 올해 5월 1일 무역투자진흥회의가 다시 열리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무역투자진흥회의는 1962년 '수출입국'을 목표로 개최되었던 수출진흥위원회를 시작으로 2009년까지 정례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수출진흥확대회의, 무역진흥확대회의 등으로 명칭은 바뀌었지만 40여 년 넘게 한국 무역 및 투자가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한 범부처적인 콘트롤 타워였습니다. 최근 EU 재정위기 회복 지원, 엔저 심화 등 대외환경 악화에 따른 기업들의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활력 있는 수출생태계와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년 만에 다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회의에서는 무역 분야에서 주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었습니까?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엔저 현상 등으로 인해 채산성 악화와 수출경쟁력 약화 등에 직면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중소형 해외건설·플랜트 등의 취약분야에 무역금융 11.1조 원을 지원합니다. 추경예산 편성과 시중은행 출연 등을 통해 엔저 대응에 1.3조 원,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6.3조 원, 중소형 해외건설·플랜트에 1조 원, 조선기자재 등 선박금융에 2.5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FTA 원산지 관리 지원 강화를 통한 FTA 활용 확대, 수출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이 보완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스스로 FTA 원산지 관리를 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전문가를 직접 파견하여 FTA 원산지 관리 전 과정에 대한 밀착 컨설팅을 진행하고, 사후검증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또한 내수·수출초보기업의 수출 대행과 FTA 활용 지원을 위한 전문무역상사 지정·육성제도를 도입하고, 기업들이 보다 쉽게 수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수출 맛보기' 프로그램과 '이동 KOTRA(코트라)' 등 수출현장으로해소 서비스도 확대합니다. 아울러,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범부처 차원의 지원시스템도 구축합니다. 국내는 11개 지방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외에서는 해외공관을 중심으로 기업의 현장애로를 상시 발굴하고, 매일 산업부가 주관하는 범부처 수출투자지원협의회와 매분기 대통령이 주재하는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수립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FTA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에게 어떤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까?

원산지 관리에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규모별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며, 직접 수출자가 아닌 2, 3차 협력사들이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고 자료를 보관해야 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점을 감안해 인센티브를 보강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FTA-KOREA, FTA-PASS 등 원산지 관리시스템의 무료 보급을 2015년 2만 개 사업체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섬유 분야만 특화돼 있는 시스템을 기계, 전기·전자 등까지 확대해 주요 업종별로 특화된 시스템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한편, FTA 원산지 관련 애로를 분석·평가해 기존 협정 개정 및 신규 협상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FTA전담 인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실무인력을 재교육하고, 관세사나 원산지관리사 등 전문 인력 채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지역기업에 필요한 원산지 관리 전문 인력을 교육하는 데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사후검증 대비책의 경우, 최근 한·EU FTA, 한·미 FTA처럼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과 맺은 FTA에서 사후검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부담스러워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정부 차원에서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원산지 사후 검증에 최근 수출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발급 절차가 상대적으로 쉬운 자율발급 기업의 사후검증 대비를 위해 선제적·사후적 검증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사후검증 매뉴얼을 보급 중에 있으며, 올 상반기

기에는 온라인 콘텐츠 및 자가 검증 툴을 제공해 기업 스스로 사후 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5월 한국무역협회에 설치돼 있는 FTA종합지원센터 내에 개설된 FTA사후검증지원센터에서는 증빙서류 작성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FTA 추진으로 세계 시장 진출의 기회가 더 크게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역량이 취약한 내수·수출초보기업의 FTA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 수는 312만 개이며, 이 중 수출기업은 8만6,000여 개로 2.8%에 불과합니다. 수출기업 중에서도 수출이 100만 달러 이하인 수출초보기업은 7만 1,000여개로 83%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수출 5만 달러 이하의 기업이 3만6,000여 개로 50%에 달하는 등 수출중소기업은 매우 영세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대·중소기업 공동출자 수출전문기업을 설립하는 등 전문무역상사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활용하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무역보험료 추가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해외 한인경제인단체와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돕

고, 내수·수출초보기업의 수출 대행과 FTA 활용 지원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 무역은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일자리, 부가가치 창출 등 새로운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데요, 앞으로 우리의 무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수출과 내수·고용의 연결고리인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확대해 수출이 일자리와 내수를 더 많이 창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은 근로자의 소득 증가를 통한 투자·소비 등 내수 활성화뿐 아니라 대기업과 소수 주력품목 중심인 한국 무역의 체질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제조업 중심의 무역에서 벗어나 무역과 통상협력, 산업 및 투자를 연계해 새로운 수출 기회를 창출하고, 수출 구조를 다변화해야 합니다. 전후방 파급 효과가 큰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통상 협력을 강화해 무역을 통한 부가가치·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문화콘텐츠·소프트웨어 등 유망품목을 발굴·육성해 수출 기반도 확충할 것입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를 통해 국내 수출 기반을 확충하고, 해외직접투자도 우리 무역의 성장과 조화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



FTA 원산지 관리 지원 강화를 통한 FTA 활용 확대, 수출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이 보완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북FTA  
활용지원센터  
↓

## 전자·섬유·철강의 중심지...FTA 효과 '톡톡'

면적이 넓은 지자체라도 제조업은 관내 특정 지역에 집중된 경우가 많다. 항만·고속도로와의 접근성, 양질의 노동인력 확보 등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곳에 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마련이다. 그러나 경상북도는 구미를 비롯한 김천·포항·영천·경주·칠곡 등에서 골고루 제조업이 발달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경북FTA활용지원센터는 관내 10개 상공회의소와 협업을 통해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글 우종국 기자 사진 김기남 기자




1960~70년대 한국의 경제개발계획은 1차 경공업, 2차 중화학공업에 이어 3차 전자산업으로 진행되었다. 구미국가산업단지는 1973년 완공된 이후 국내 전자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고, 현재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한 LG 계열사(LG디스플레이·LG이노텍 등), LG넥스원, LS전선 등의 제조시설이 들어서 있다. 또한 과거 섬유업의 중심지였던 대구·경북의 배후지답게 코오롱의 주력 생산시설도 구미에 위치하고 있다. 인근의 김천에는 유한킴벌리·아모레퍼시픽·코오롱의 생산시설과 현대모비스의 물류단지가 있고, 칠곡에는 구미에 위치한 대기업들의 협력사들이 포진하고 있다.

경북 북부가 이처럼 경박단소(輕薄短小) 산업이 주력인 반면 경북 남부는 중후장대(重厚長大) 산업이 주력이다. 포항에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국내 최대 철강업체인 포스코를 비

롯해 철을 이용한 자동차부품·기계업종들이 많고, 울산의 배후단지인 경주와 영천에는 자동차부품업체들이 즐비하다.

경북FTA활용지원센터의 김중배 센터장은 “전자산업의 경우 이미 무관세인 제품이 많아 섬유와 자동차부품을 중심으로 FTA 활용률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해당 업체들의 경우 FTA 활용의 단기적 이익이 작다 보니 활용을 안 하려고 하는 곳이 많아 FTA 활용의 이익은 장기적으로 보자고 설득해 가면서 활용률을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북에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농축산업도 발달해 있는데, FTA로 인한 농업 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중이다. 올 하반기에 농축산 분야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 경북FTA활용지원센터의 활용 사례

#### 골프용 퍼터 제조업체 A사

관세인하분을 현지 프로모션 비용으로 활용

구미에 위치한 직원 20명 규모의 A사는 골프용 퍼터 전문 제조업체로 전량 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최근 A사는 바이어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을 받았는데, 이를 수행하지 못하면 거래 중단 또는 관세인하분만큼 가격을 인하할 것을 동시에 요구받았다. FTA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던 영세한 중소기업이 FTA 활용에 나서게 되는 전형적인 스토리다.

경북FTA활용지원센터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품목분류와 원산지 판정부 터 시작했다. A사 제품(HS코드: 9506.31-골프채, 완제품에 한함)의 태국 수출 기준세율은 10%로 FTA 적용 시 0%이며, 원산지 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45% 이상(CTH or BD 45%)이다.

컨설팅 방문 결과 A사 생산품인 퍼터의 부분품인 샤프트의 세번이 9506류로 세번변경기준 적용이 어려웠다. 부가가치비율로 계산하려고 보니 A사는 FTA 활용에 필요한 자재명세서(BOM)나 원가계산서 같은 기초서류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재료별 거래구조 파악 및 거래내역서 분석부터 새로 시작했고, 웹을 통한 원산지증명서 신청 절차와 세관 제출서류를 진행해 A사는 최종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한편 A사는 원산지증명서를 바이어에 전달하면서 관세인하분을 태국 현지 프로모션 비용으로 활용하는 것을 협의 중이다. 단순히 바이어의 요구대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주고 받기' 개념으로 프로모션을 요구하는 것은 FTA 활용에서 고려해볼 만한 전략이다.



#### 흑마늘 수출업체 B사

농협에서 마늘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받아

수출전문업체 B사는 유럽으로 흑마늘을 수출하는 것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흑마늘은 생마늘이 일정한 온도·습도에서 건조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B사는 국내 흑마늘 영농조합법인과 계약을 맺고 프랑스 등 유럽으로 수출을 하고 있으며 또 다른 EU 국가로 수출을 늘리려고 하고 있다. B사는 식품박람회 등을 통해 흑마늘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EU FTA로 유럽 수출 시 흑마늘(HS코드: 0712.90)은 관세 12.8%가 즉시철폐되는 품목이다. 박람회에서는 이에 대한 바이어들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문의가 많았다.

경북센터의 컨설팅 결과 B사는 한·EU FTA에서 규정하는 6,000유로 이상 수출에 해당되어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야 했다. 또한 농산물의 특성상 실제 마늘을 생산하는 농민으로부터 생산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야 했다. 결국 원산지 입증은 해당 영농조합이 속한 단위 농협의 FTA 담당자 명의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받아 해결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서류를 근거로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을 수 있었다.

이후 B사는 프랑스측 신규 바이어와 수출계약을 맺어 연간 매출 20%가 증가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식품박람회 참여와 FTA 관세인하를 꾸준히 홍보하면서 수출 증가에 기대를 걸고 있다.



### mini interview



**김중배**  
경북FTA활용지원센터 센터장

경북의 행정 중심인 도청은 대구에 있지만, 경북의 산업 중심지는 구미라고 할 수 있다. 경북FTA활용지원센터가 위치한 구미상공회의소에서 김중배 센터장을 만났다.

#### 도내 FTA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도내 중소기업은 19만3,314개(2011년 기준)로 주력업종은 전기전자, 기계금속업종으로 한국 수출기업의 56%(업종 수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업종은 이미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고, 철강·경산·경주·영천 등에 분포하는 자동차 관련 제조업(수출업체의 14.7%)이 FTA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 FTA에 소극적인 업체들을 어떻게 활용에 나서게 할 수 있을까요?

대개 단기적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신경을 안 쓰는데,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 장기적으로 이익이 클 수 있습니다. 또한 FTA는 한국 기업들의 시장을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무역 거래에서의 규범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 타 FTA활용지원센터와는 차별화된 경북센터만의 사업이나 서비스가 있습니까?

제도적으로는 없지만, 저희는 서비스 마인드에서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과 단순히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아니라 친근한 파트너 또는 동반자 관계를 맺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기업들이 관세사에게 주말에도 전화 문의를 통해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관세사에게는 대휴 또는 수당으로 이를 보상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에 대해 경북센터의 성원찬 관세사는 “워낙 영세업체가 많고 직원 1~2명인 경우도 많다. 센터의 컨설팅이 아니면 FTA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아니면 못 한다는 생각으로 상담에 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후검증 걱정 끝! - FTA사후검증지원센터 사후검증 요청 받으면 바로 전화하세요

‘FTA 활용도 힘들었는데, 사후검증은 산 넘어 산’이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에게 희소식이 생겼다. 한국무역협회에 설치돼 있는 6개 정부부처 합동 조직인 ‘FTA무역종합지원센터’ 내에 지난 5월 15일 ‘FTA사후검증지원센터’가 설치된 것. FTA사후검증지원센터는 한국산 원산지 입증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을 받고 있는 국내 수출업체들의 대응을 돕고, 향후 사후검증의 징후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문제점과 개선책을 진단해 준다.

글 우종국 기자 사진 김기남 기자

FTA사후검증지원센터가 개소한 것은 최근 사후검증 관련 자료 요구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세관이 위탁받은 간접검증은 2011년 84건, 2012년 222건, 2013년(3월까지) 7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세관이 보내는 검증 요청서의 수령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이해 및 대처요령이 미흡한 경우가 많고, 이에 대처하지 못해 특혜관세가 철회된다면 국내 기업들과 해외 바이어와의 분쟁도 잦아질 수 있다.

이런 배경으로 오픈한 FTA사후검증지원센터는 크게 ‘대응 지원’과 ‘예방 지원’의 두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대응 지원은 이미 사후검증 요청을 받은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국 세관이 발급하는 정보제공요청서(CBP Form 28)를 비롯한 증빙서류 작성 및 통상법률 자문 등을 밀착 지원하게 된다.

“FTA사후검증지원센터는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사후검증에 대한 공포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FTA사후검증지원센터 업체 대응 프로세스



현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이 미국의 정보제공요청서에 대한 공포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수출 중소기업이 30일 내 소명 자료를 작성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기업을 방문해 현장 지원에 나서고 있다.

예방 지원은 사후검증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검증요청 전 미리 전하는 활동이다. 이를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수원(5월 10일)·대구(5월 13일)·전주(5월 24일)·구미(5월 28일)·창원(5월 29일)·대전(5월 31일) 등지에서 한 달 동안 진행했다.

### 사후검증이 FTA 활용의 걸림돌 안 되도록 지원

FTA사후검증지원센터는 업체로부터 지원 요청이 올 경우 직접 지원이 가능한 경우 최대한 현장 지원에 나서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유관기관 및 업종별 단체, 지역FTA활용지원센터, 관세청 등과의 연계를 통해 신속하고 용이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연결해 주기도 한다. 서울과 먼 지역에 위치한 기업의 경우 해당 지역 내의 FTA활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검증 가능성이 높은 섬유·자동차부품 분야는 업종단체 등과 협력해 사전진단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5월 15일 FTA사후검증지원센터 개소식에 참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김재홍 제1차관은 “사후검증 부담으로 FTA 활용을 꺼리는 일이 없도록 센터가 중소기업에 밀착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FTA무역종합지원센터의 김영환 단장 또한 “한·미 FTA 발효 2년차로 접어든 현재 국내 수출기업의 대미 FTA 활용률은 70%에 이를 정도로 크게 늘었고, 그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사후검증의 부담도 늘어났다”며 “FTA사후검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수출업계의 사후검증 대응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사후검증 관련 문의는 FTA무역종합지원센터의 상담 전용 번호인 1566-5114를 이용하거나, 전국 15개 지역 FTA활용지원센터로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 FTA사후검증지원센터의 사후검증 지원 사례

#### 내부 관리 자료를 토대로 소명자료 작성 완료



국내 수출업체 A사는 자동차 엔진 피스톤에 들어가는 엔진밸브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로 외주(사급)생산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A사가 수출한 제품은 A사의 현지 자회사에서 간단한 패키징 후 현지 자동차 회사에 판매하고 있다. A사는 포워더(forwarder)를 통해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신고서(Entry Summary)의 품목 분류 번호(HTSUS No.) 앞에 한국산(KR) 표시를 해 신고를 함으로써 특혜관세 적용을 받았다. (32페이지 참고)

얼마 후 미국 세관에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서(CBP Form 28)를 통해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와 근거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미국의 수입자는 물품의 수입 업무를 대행해주는 포워더에게 정보제공요청서를 송부했고, 포워더의 법무팀은 1주일 간의 검토 끝에 한국의 수출자에게 다시 해당 정보제공요청서를 송부해 미국 세관의 요청사항을 알렸다.

포워더로부터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A사는 지난 4월 FTA사후검증지원센터(당시 FTA사후검증지원실)의 문을 두드렸다. 이후 지원센터는 미국 CBP Form 28의 내용을 파악해 소명자료 목록을 작성토록 했고, 동시에 A사의 원산지 관리 현황을 파악했다. 당시 A사는 자체 ERP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생산이력관리 정도가 별도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며, 원가회계는 관리부 담당자가 엑셀로 관리하고 있었다. 한·미 FTA 발효 시점부터 FTA를 활용하고 있었으며,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한 기초자료는 작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지원센터는 A사의 원재료 구매부터 수출까지 전체적인 흐름도(flow chart), 제조공정도 및 회사 내부 관리 현황을 검토한 후 영문 소명서 및 소명서의 각 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보충 서류인 자재명세서(BOM), 원가산출내역서, 원재료수불부, 제품수불부, 생산가능수량 등의 구비 요령을 안내했다. 한국의 수출자는 미국의 수입자에게 해당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와 미국 세관에서 요청하는 증빙자료를 작성해 송부했다. 미국의 수입자는 이를 기초로 미국의 세관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



## FTA 활용 터키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 FTA는 ‘수단’일 뿐…현지 진출 ‘전략’이 중요

지난 5월 1일 한국의 9번째 FTA인 한·터키 FTA가 발효됨으로써 터키 시장이 한국의 새로운 경제영토가 됐다. 그러나 FTA는 그 자체로 무역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만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 산업통상자원부·한국무역협회·코트리가 공동으로 지난 5월 3일 터키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를 개최한 배경이다.

글 우중국 기자 사진 김기남 기자



“한·터키 양국 간 경제규모를 볼 때 향후 교역과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FTA 활용 잠재력도 매우 큼니다. 한·터키 FTA를 잘 활용하면 터키와 인근 신흥시장 개척에 큰 성과가 있으리라고 보며, 지금의 엔저, 유럽 재정위기 등 어려운 대외여건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축사를 맡은 권평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이처럼 한·터키 FTA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업들에게 FTA 활용을 당부했다.

첫 세션을 맡은 신동준 산업통상자원부 FTA활용 촉진과 과장은 “FTA의 경제적 효과가 주로 관세인 하 효과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보다는 사업 기회를 얼마나 잘 찾느냐에 달려 있다”며 터키시장 진출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U와 관세동맹을 맺고 있는 터키의 특성상 한·터키 FTA는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서 원칙적으로 한·EU FTA와 동일하다. 원산지 증명은 전면 자율증명 방식으로 원칙적으로 수출자가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두 번째 세션을 맡은 명진호 한국무역협회 국제 무역연구원 연구원은 “터키는 인구 8,000만 명으로 전체 GDP는 7,726억 달러(2011년)로 한국의 3분의 2 수준으로 큰 시장이다. 특히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35세 이하의 젊은 층으로 노동력이 풍부하고 향후 구매력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이상관 코트라 이스탄불 무역관장이 터키 현지의 비즈니스 관행과 주의점을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터키는 공화국 수립 100주년째인 2023년까지 GDP 2조 달러를 달성해 세계 10위 경제 규모를 이루겠다는 ‘비전 2023’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쿄, 마드리드와 함께 2020년 올림픽 개최지를 놓고 경합을 벌이고 있다. 이를 위해 발전소·철도·고속도로 등의 대규모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 중이고, 정보기술 분야에서도 전 학생에게 태블릿PC 보급을 목표로 e러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한편 터키는 예로부터 동서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해와 거래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돼 선불리 접근했다

가는 주도권을 뺏기고 매달려 갈 수 있다고 이 관장은 경고했다. 그에 따르면 터키 상인들은 관심이 낮은 상품이라도 일단 독점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서, 시장 진입이 급한 한국기업이 이에 응하기 쉽지만, 터키 측 파트너의 실적이 부진해도 계약을 파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또한 1차 가격 협상 시 만족을 표하면서도 2차 협상 때 복수의 경쟁자를 동원해 가격 흥정을 지속하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더불어 터키 바이어들은 대부분 재수출 또는 타기업에 납품하는 기업들로 납기 지연에 민감한데, 한국은 터키 접근성이 떨어져 납기 지연 사태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동서무역이 발달한 터키의 특성상 터키 상인들은 거래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지 진출 시 사업성이 낮아도 무조건 판매 독점권을 요구하는데, 선불리 응할 경우 파트너의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계약 해지가 쉽지 않다는 점 등 현지 비즈니스의 특성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 FTA 활용 업종단체 간담회

## FTA 활용 애로에 민·관이 공감

미국, 중국, 유럽 등 거대경제권이 FTA로 합종연횡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기존에 체결한 FTA의 선점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통상 환경이다. 정부와 민간 모두 힘을 합쳐 FTA 활용률을 극대화하는 것이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정부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적극적으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글 우중국 기자 사진 김기남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김재홍 제1차관 및 통상국내대책관실 관계자들은 지난 5월 15일 무역센터에서 8개 업종단체, 수출기업 2곳, 수출 유관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등과 함께 FTA 활용 업종단체 간담회를 가졌다.

김재홍 제1차관은 “5월 1일 한·터키 FTA 발효로 한국의 FTA는 총 9건, 46개국에 이른다. 현재 한국의 FTA 교역량은 34%에 이르고, 2017년이면 6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엔저, 양적확대 축소 등으로 통상환경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출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업종별 단체가 소속 회원 기업들에게 FTA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면, 정부 차원에서도 인센티브가 주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모두발언을 했다.

박영탁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부회장은 “기계업종은 1~4차 협력사들까지 있는 산업의 깊어(먹이사슬)가 긴 업종으로 2~4차 업체가 FTA 대응을 못 하면

고구마 줄기처럼 쪼개 나오기 때문에 지원대상의 범위가 넓다. 지원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영환 FTA무역종합지원센터 단장과 조용만 산업부 통상국내대책관실 국장은 “협력업체를 함께 교육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협력업체를 모아 주면 교육에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자동차부품사인 햇빛일루콤의 김현철 대표는 “중소기업은 인력 확보가 참 어렵다. FTA 전문인력 양성은 너무 먼 나라 얘기 같다. 인턴사원 채용 시의 지원처럼 FTA 전문 인력 채용 때에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자 조용만 국장은 “원산지관리사 채용 시 비용지원이 있으니 활용해 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원철 대한석유협회 산업정책본부 본부장은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늘릴 수 없는가”라고 문의했다. 박종환 산업부 FTA이행과 과장은 “상대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협의해 보고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겠다”고 답했다.

김창로 한국석유화학협회 부회장이 “석유화학은

소재 생산 업체다. 소재 생산 업체에게도 사후검증이 나오는가”라고 질문하자, 김영환 단장은 “검증의 시작은 현지 수입자에게 요청을 하지만, 수입자가 다시 수출자, 제조자에게 입증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결국은 수출한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했다.

김재홍 제1차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한 것 중에 만족할 만한 답도 있고, 부족한 답도 있고,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할 답도 있으나, 문답 과정에서 앞으로 개선될 조짐이 보인다는 기대는 다들 했을 것이다. 산업부 차원에서도 애로사항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FTA가 무역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기업들에게 당부했다.

▲지난 5월 15일 무역센터에서 열린 FTA 활용 업종단체 간담회에서 기업·업종대표들은 당장의 FTA 활용 애로사항부터 협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 과제까지 다양한 문의와 요구사항을 쏟아냈고, 정부 측은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한·아세안 FTA의 현황과 성과

# 대아세안 수출 증가 뚜렷, 수입 증가세는 감소

한·아세안(ASEAN) FTA는 칠레를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개도국과 체결한 최초의 FTA로서 협상 당시 아세안에 대한 수출 증대 효과에 많은 기대감이 있었으며, 이러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글 김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략연구팀 부연구위원



우리나라와 아세안은 협상원칙 등에 대한 기본협정문에 합의한 후 이를 토대로 상품무역협정(2007년 6월), 서비스협정(2009년 5월), 투자협정(2009년 9월)을 순차적으로 발효했다. 상품 분야에 서 우리나라는 총 5,224개 품목(HS 6단위) 가운데 4,742개 품목을 일반품목군으로 개방했고, 482개 품목은 민감품목군으로 분류했다. 일반품목군은 수입액 기준으로 전체 수입액의 91.55%를 차지하며, 482개 민감품목군에 포함된 품목 중 200개(수입액 기준 2.81%)는 초민감품목으로 처리했다.

서비스 분야의 양허 수준은 한·미 FTA의 개방 수준보다 낮고, DDA 양허 제안서에 아세안의 개방 요청을 일부 반영한 수준에서 합의했다. 아세안의 관세철폐 품목 범위는 품목 수 기준 약 90% 수준이며, 나머지는 민감품목으로 분류됐다. 아세안 국가들은 철강, 자동차 등에서 점진적인 관세 인하 및 철폐를 이행하고, 서비스 분야에서는 WTO 양허 수준에서 일부를 추가하는 수준에서 개방했다.

## 한국은 전기·전자, 아세안은 원자재 수출 늘어

2007년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양자 간 교역은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수출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대아세안 수출은 FTA 발효 전인 2000~06년 사이 연평균 8.1%씩 증가했으나, FTA 발효 이후인 2007~11년간 연평균 10.8% 늘어났다(2011년 718억 달러). 반면 같은 기간 대아세안 연평균 수입 증가율은 8.2%로 FTA 발효 전의 8.5%에 비해 약간 낮아졌다(2011년 531.2억 달러). 산업별로 보면, FTA 발효 이후 대아세안 수출은 전기·전자, 석유화학, 철강, 선박 등 다양한 산업에 걸쳐 증가했다.

한편, 대아세안 수입은 FTA 발효 이후 원자재 산업을 중심으로 대폭 증가했으나, 자본재의 경우 수입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기·전자 수입은 FTA 발효 직후인 2007~08년 증가 폭이 다소 커졌으나 2008년 이후부터 감소세를 나타냈다. 요컨대, FTA 발효 이후 대아세안 교역은 주로 공산품 수출과 원자재 수입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는바, 보완적 교역구조가 심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기업별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한·아세안 FTA의 긍정적인 효과가 두드러진다. 대아세안 수출 기업 수는 2006년까지 연평균 2.6%의 증가율을 보이다가 FTA가 발효된 2007년부터는 연평균 5.3% 상승하여 2009년에는 수출기업 수 6,454개로서, 2006년에 비해 1.2배 많아졌다. 특히 2009년의 경우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기존 수출기업 수가 전년 대비 0.9% 가량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수출기업의 수는 26.7%나 늘어났다. 또한 기존 수출기업에 의한 수출 규모는 FTA 발효 다음해인 2008년에 전년 대비 5.9% 증가한



반면, 신규 수출기업에 의한 수출규모는 162.3% 많아졌다. 수출중소기업 수 역시 FTA를 계기로 증가 폭이 확대되어 FTA 발효 전후(2004~06년, 2007~09년)를 비교할 때,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율은 14.3%에서 15.3%로 상승했다.

투자의 경우 FTA 체결 이후 아세안에 대한 FDI(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아세안 FDI는 FTA 발효를 기점으로 2007년 31.4억 달러에서 2011년 46억 달러로 증가했다. 아세안에 대한 투자는 제조업 분야(총 투자액 중 46.7%)가 주종을 이루며, 광업(16.7%, 이상 2012년 6월 누적액 기준)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제조업 중에서는 전기·전자, 기계 등 기술 및 자본집약적인 산업으로 투자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베트남, 캄보디아)의 경우 부동산 및 임대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다. 반면, 아세안으로 부터의 직접투자는 FTA 발효 이후 제자리걸음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1.4%에서 2010년 4.4%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전기·전자, 금융·보험업 등에 대한 투자가 줄고 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투자는 FTA 발효 이후 증가했다.

## 제3국 교역 감소 없이 양자 간 교역 늘어나

종합하면,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양자 간 교역은 확대되는 추세이며, 제조업과 광업 등을 중심으로 아세안에 대한 수직적 투자

가 증가하고 있는바, 긍정적인 효과가 큰 FTA로 평가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실증분석 결과(배찬권·김정곤·금혜윤·장용준, '한국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2012)에 의하면, FTA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의 크기는 한·싱가포르 FTA, 한·칠레 FTA, 한·아세안(싱가포르 제외) FTA 순, 그리고 수입증대 효과는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아세안(싱가포르 제외) FTA, 한·EFTA FTA 순으로 나타난 바 있다. 특히 FTA 발효 이후 양자 간 교역의 보완적 구조가 심화되었는데, 아세안이 공업화를 지속하면서 이러한 보완적 구조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한·아세안 FTA는 무역창출(trade creation: FTA를 통해 체결국 간에 무역이 새롭게 창출되는 것)효과가 큰 FTA로서, 대체로 제3국과의 교역량 감소 없이 양자 간 교역을 확대시켰다.

다만, 이와 같은 FTA 발효 이후 교역 증가를 관세 감축의 결과로만 볼 수는 없다. 태국의 경우 2010년에야 양자 간 FTA를 발효시킨 것과 같이, 실질적인 FTA 이행 기간은 국별로 차이가 있고 비교적 짧은 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발효 이후 FTA 특혜관세 활용률이 낮은 편으로서, 발효 2년차 시점에서 대아세안 수입특혜관세 활용률은 49.1%, 수출특혜관세 활용률은 3.5%에 불과했다(2011년에는 33.1%로 증가). 따라서 FTA 체결에 따른 증진효과(promotion effect)가 교역 증가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생각되며, 활용률이 향상되면 FTA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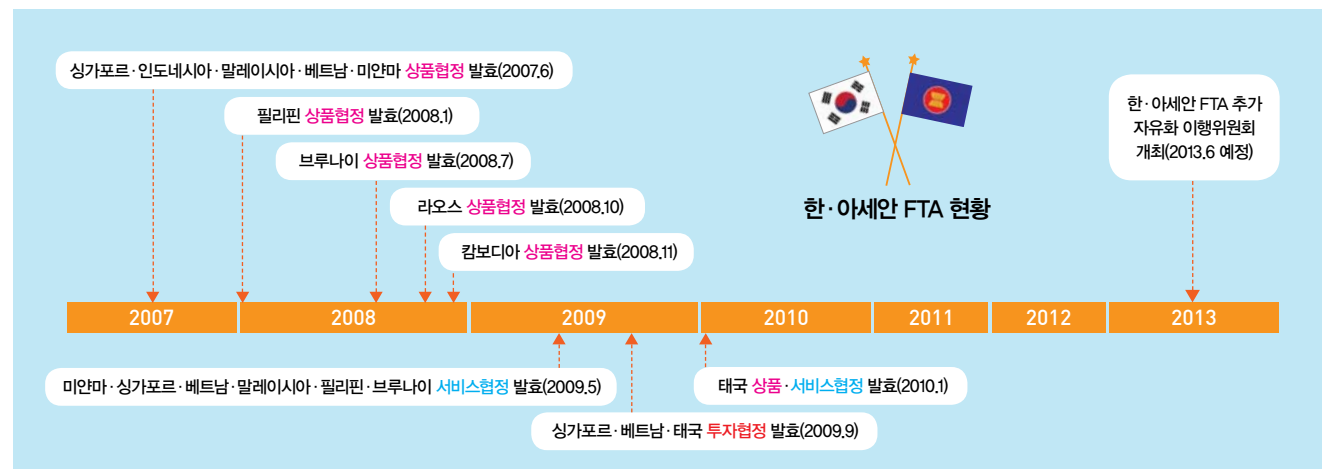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 ‘생산기지’에서 ‘소비시장’으로 변화... 낮은 개방 수준 더 높여야

한·아세안 FTA는 상품협정의 제15조 1항과 2항에서 추후 추가적으로 개방의 폭을 넓히기 위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한국과 아세안은 2011년 8월 한·아세안 통상장관회의에서 민감품목 추가자유화 검토에 합의했고 2015년까지 추가자유화 협상 및 협정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글 김한성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07년 6월 1일 발효된 한·아세안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네 번째 FTA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주요 교역국(또는 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2005년부터 시작된 양자 간 협상은 상품협상을 시작으로 이후 서비스, 투자협상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협상을 완료·발효했다. 상품협정은 아세안 10개국 중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마무리된 국가와 2007년 6월부터 순차적으로 협정이 발효됐고 2010년 1월1일 아세안 10개국 중 태국과 마지막으로 발효에 들어갔다.

### 타 FTA 대비 낮은 자유화 수준 개선 필요해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한국과 아세안 간의 양자 간 교역은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빠르게 향상됐다. 2007년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수출액은 약 387억 달러로 중국, EU, 미국에 이어 제4위 수출국이었으나 2011년 대아세안 수출액은 718억 달러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다. 수입에서도 동 기간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수입은 331억 달러에서 531억 달러로 약 60.4% 증가하였고 중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 수입국(또는 경제권)이 되었다. 특히 수출의 경우 2007~11년 기간에 무려 85.5%나 증가하여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으로 급부상한 중국에 대한 수출 증가율(63.7%)을 상회하였다. 또한 교역의 양적인 팽창과 더불어 질적으로 교역다변화가 심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총 수출품목에서 아세안으로 수출된 품목의 비중은 한·아세안 FTA 협상 직전인 2004년에 69.4%에서 2011년에는 75.4%로 증가하였고 수입에서 총 수입품목 대비 아세안 수입품목 비중도 같은 기간 51.7%에서 57.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비록 한·아세안 FTA가 양자 간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행 단계에서는 이행 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이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다. 특히 한·아세안 FTA의 상품자유화 수준이 우리나라 여타 FTA에 비해 낮다는 점은 중요 개선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행 한·아세안 FTA의 상품부문 관세철폐 비중은 품목 수 기준으로 90%에 달하고 있으며, 나머지 품목은 일부 관세가 인하되거나 TRQ(관세할당) 혹은 양허제외 품목으로 분류되고 있다. 90% 상품자유화 비중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여타 FTA의 상품자유화 비중이 98~99%에 달하는 점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자유화 수준이며 상호대응세율이나 협정문 상의 모델러티(modality: 분야별 지침)를 활용한 실질적 양허제의 품목 등을 고려하면 관세 철폐 비중이나 양허제의 품목의 비중은 협정문에 명시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아세안 일부 국가들은 우리나라 주요 관심품목인 철강, 자동차 및 차량 부품 등을 양허 제외하고 있어 FTA를 통한 상품 자유화의 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급변한 통상환경 반영해야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제15조 제2항에서는 ‘당사국들이 민감품목군으로 분류한 품목에 관한 호혜적 관세율 조치에 관한 조건 및 민감 품목군의 품목 수의 추가적 감축 여부를 포함하여 민감 품목군을 2012년도 그리고 그 이후 매 3년마다 검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아세안 측의 준비 부족으로 올해부터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한·아세안 이행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추가자유화에 대한 공동연구에서는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로 인해 우리나라 실질 GDP는 2025년 기준으로 약 0.8~1.1% 증가하고 수출과 수입은 각각 2.7~3.0%와 3.0~3.3%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국내 연구에서도 한·아세안 FTA로 양국의 관세가 완전 철폐될 경우에 우리나라 수출은 국별로 1억~16억 달러 증가하며 수입은 약 6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추가협상을 통해 협상 이후 급변한 통상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합의 도출이 가능하다. 한·아세안 FTA 체결 후, 아세안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과 양자 간 FTA를 체결하였고, 우리나라도 EU, 미국 등과 FTA를 완료하였다. 또한 미국 발 금융위기의 확산으로 역내국 간 경제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1990년대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아세안의 꾸준한 성장은 아세안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이 ‘생산시장’에서 ‘수출시장’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는 최초 협상 이후 변화한 통상환경을 반영하고 이행 상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0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과 협상을 하는 과정은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매우 어려운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경제·사회·문화적 배경을 지닌 아세안을 상대로 협상을 이끌어가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아세안의 농축산물 개방 요구 등은 우리나라에게도 민감한 부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추가 협상을 통해 아세안 시장에 대한 시장접근성을 개선하고 주요 교역 대상국인 아세안과의 교역 관계를 발전적으로 심화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업이 아세안 시장 선점 및 공정한 경쟁을 위한 발판이 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아세안과의 경제적 관계를 격상시킬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관 솔루션 전문가 이경모 페덱스 CSN팀 차장

## 220개국 통관 절차 ‘빠삭’...FTA로 몸값 상승

전 세계 무역은 FTA 체결이 늘어나면서 점점 그 장벽이 낮아지고 있지만, 반대로 통관은 까다로워지는 추세다. FTA 체결국끼리는 원산지 판정의 문제가 있고, 동식물은 세균 및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아야 하고, 또 불황일 때는 까다로운 통관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전 세계 국가마다 상이한 통관절차도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이러한 통관에 대한 해법을 제공하는 것이 통관 솔루션 전문가다.

글 우종국 기자  
사진 김기남 기자

페덱스(FedEx)는 미국계 글로벌 특송 업체다.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미국이나 유럽으로 익일배송이 가능하다. 일종의 글로벌 ‘퀵서비스’인 셈이다. 그러나 간단한 물품 하나를 보내더라도 다량으로 보내는 것과 똑같이 배송지 국가에서 통관을 거쳐야 한다. 심지어 싸이의 ‘젠틀맨’ 음악 CD나 라면 하나를 보내더라도 복잡한 통관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가 물품 하나를 보내기 위해 관세사를 고용할 수도 없는 일. FedEx CSN(Customs Solution Network)팀의 이경모 차장(36)은 이런 복잡한 통관 절차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고객에게 필요한 절차와 서류 등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일을 맡고 있다.

“일반인이라도 유학 간 자녀나 친구에게 라면·과자·한약·배즙·분유 등을 보내 본 적이 있다면 통관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실감할 거예요. 또 기업의 경우는 하나의 샘플제품을 50개국으로 보낸다면 50개 나라의 통관절차를 다 알고 있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한 이 차장이 통관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도 외국으로 물건을 보낸 경험

에서다. 이후 대학원에서 국제통상학을 전공하고 관련 연구소에서 리서치를 하다 현재의 직장에서 실무를 담당하게 됐다.

이 차장이 속한 부서는 FedEx가 서비스하는 전 세계 220개국 네트워크를 통해 통관에 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실시간으로 꿰고 있는 정보를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간단한 안내에서부터 방문 교육, 세미나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통관뿐만 아니라 고객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솔루션이 신속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경력이 오래 될수록 전문성을 인정받는다.

한국의 FTA 발효국이 늘어나는 것도 통관전문가의 몸값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2011년 7월 한·EU FTA 발효 이후 고객들의 FTA 관련 문의가 급격히 증가했어요. FTA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커지고 비즈니스 기회가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저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저희 부서도 한국 관세청과 정부 기관에서 구축한 온라인 FTA 포털 및 교육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출 담당자들이 실제 무역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통관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FTA로 무역의 복잡성이 커지면서 통관 솔루션 전문가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 사후검증, 미리 준비하면 걱정 끝!

안종만



사후검증, 최고경영자가 나서서 직접 챙겨야 합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는 산업 환경에서 중소기업의 성공 조건은 무엇일까. 주력업종의 경쟁이 심화될 때 과감히 업종을 변경하고, 기술개발로 품질·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아닐까. 신성전자는 이러한 과제를 하나하나 극복한 일종의 ‘롤 모델’ 같은 회사다. 게다가 한·미 FTA 활용에서도 적극 나서면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

글 우중국 기자 사진 서범세 기자



앰프 및 스피커 제조사 **신성전자**

## 한·미 FTA로 관세 4.9% 인하… 주문량 20% 늘어

신성전자는 일산 백석역에서 버스 두 정거장 거리에 있는 ‘일산테크노파크’에 위치해 있다. 이른바 아파트형 공장으로, 인근의 주거용 아파트와 나란히 들어서 있다. 전자제품은 무게·부피에 비해 부가가치가 큰 제품이라 큰 창고보다는 양질의 노동력이 중요하다. 대개 ‘공장’이라고 하면 한적한 시골에 위치하게 마련이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도심 내에 위치한 것을 보면 그만큼 품질에 대한 고집이 남다름을 짐작할 수 있다.

신성전자의 주력제품은 ‘PA(Power Amplifier) 앰프와 ‘스피커’로 35명의 직원이 지난해 약 500만 달러를 수출했다. 신성전자 제품은 가정용은 아니고 대개 통신사 등 산업체에서 쓰이는 제품들이라 세련된 디자인은 아니다. 투박하지만 성능이 우수하고 고장이 없어야 하는 것이 품질의 관건이다. 내수 판매는 없고 전량 해외 수출하며 수출국 중 미국 비중은 약 80%가량이다. 주력 제품인 PA앰프(HS코드: 8518.40)와 스피커(8518.21, 8518.29), 마이크(8518.10) 등의 미국 수출 관세는 4.9%였지만, 2012년 3월 한·미 FTA 발효 이후 신성전자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제품의 관세는 0%가 됐다. 한·미 FTA가 새로운 날개가 된 것이다.

“

김 대표에 따르면 “바이어들이 체감하는 수입가격 인하폭은 4.9% 이상”이다. 관세가 인하되니 수입가격에 매겨지는 부가가치세도 추가로 인하되고, 수입수수료도 면제되므로 바이어가 느끼는 가격 할인율은 7%에 가깝다는 것이다 ”



좁은 국내시장에서 저가 경쟁을 했던 신성전자는 신제품 개발 및 수출 시장 개척을 통해 미국 시장에서 70~8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 내수시장 과열되자 과감히 업종 전환

전기전자를 전공한 김상훈 대표(62)는 국내 굴지의 가전업체에서 퇴직한 후 1978년 신성전자를 설립했다. 당시의 주력 업종은 인터폰과 도어폰으로 이때는 내수 위주로 공급하던 때였다. 그러나 1990년대 말 IMF 구제금융 위기를 신성전자도 피해갈 수 없었다. 또한 인터폰·도어폰은 기술 진입장벽이 낮은 저부가가치 산업이라 시장은 포화 상태였다. 김 대표는 과감히 업종 변경을 결정했다.


“좁은 국내 시장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아이템을 찾기 위해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칠레에서부터 캐나다까지 아메리카 대륙을 누볐고,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터키 이스탄불까지 아프리카·중동·서남아시아를 훑었습니다. 논의 안압이 높은 상태에서 비행기로 강행군을 하다 보니 망막이 터져 실명 위기까지 갈 정도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김 대표는 PA앰프와 스피커를 업종으로 선정했다. 신성전자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은 고가의 하이퀄리티 제품이다. 저가품은 중국제품에 밀려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해 고(高)퀄리티 제품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국내시장 대신 수출을 선택한 것도 하이 퀄리티 제품은 선진국이라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였다. 신성전자 제품에 대한 미국 바이어들의 만족도는 꽤 높은 편이다. 품질은 일본제품에 뒤지지 않으면서, 가격은 일본제품보다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신성전자의 PA앰프(OEM)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70%, 혼스피커(horn speaker) (OEM)는 80%가량이다.

### 바이어의 체감 할인율은 관세 감소폭보다 커

특히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미국 바이어들의 관심은 기대 이상이었다. 김 대표에 따르면 “바이어들이 체감하는 수입가격 인하폭은 4.9% 이상”이다. 관세가 인하되니 수입가격에 매겨지는 부가가치세도 추가로 인하되고, 수입수수료도 면제되므로 바이어가 느끼는 가격 할인율은 7%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최근 전년 대비 15~20%의 주문량이 늘어나면서 신성전자는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중이다. “그간 중국과 인도에서 구매하던 바이어들이 한국으로 주문처를 변경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런 FTA의 혜택이 그냥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김 대표는 매사에 열성적인 성격대로 FTA 활용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김 대표는 “한·미 FTA를 5개월 전부터 공부해 가면서 준비했다. 사실 중소기업은 기술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FTA까지 사장이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 발효 전후 일산 킨텍스(KINTEX)에 위치한 경기북서부FTA 활용지원센터로부터 수차례 상담과 방문컨설팅을 받았는데, 이때도 처음부터 김 대표가 직원들과 함께 참여해 FTA 활용을 신속하게 할 수 있었다.

최근 신성전자는 미국 바이어로부터 사후검증 자료를 요청받았다. 미국 세관이 바이어에게 원산지 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바이어가 제조사에게 자료를 요구한 것이었다. 신성전자는 최고경영자가 나서서 미리부터 한·미 FTA를 준비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사후검증에 대응할 수 있었다. 





# FTA 활용 팁 - 미소기준 제대로 활용하기

## 세번변경기준 적용 시 비장의 카드로 내밀어라

세번변경기준을 통해 역내산 판정을 받고자 할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의 10% 이내(협정·품목에 따라 다름)에 한해 역외산을 허용하는 것을 미소기준이라고 한다. 미소기준은 완제품과 부분품의 HS코드가 비슷한 현재의 분류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FTA 활용의 폭을 넓히는 기능을 하고 있다.

글 고태진 관세법인 한림 대표관세사

우리나라 수출 중소기업에 있어 FTA 활용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각 협정에서 요구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에 맞춰 원산지 판정과 관리를 해야 한다. 이 점은 정부에서도 FTA 활용을 위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런데 주요 공정을 자가 공장에서 직접 수행해 만들어진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협정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충족되지 못해 역외산으로 원산지가 역외산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완제품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일 경우 관세율표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피치 못하게 완제품의 품목번호와 그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부분품의 품목번호가 변경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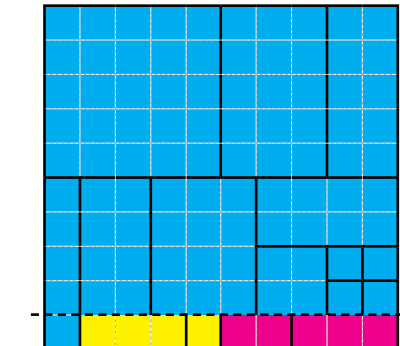
즉 품목번호의 분류원칙에 따라 완제품의 부분품으로 품목번호가 분류되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HS코드 6

단위까지는 동일하고 이하 7~10자리 품목번호(HSK)에서 번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6단위까지만을 고려하여 원산지를 판정하는 모든 협정에 있어서는 세번변경이 일어날 수가 없는 생산구조인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자체 공장을 갖고 직접 생산을 하여 부가가치를 올리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FTA 특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부분품을 납품하는 국내 업체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게 되면 납품받은 부분품과의 관계에서 설명 세번이 바뀌지 않더라도, 완제품이 역내산 원산지로 판정되는데 문제가 없다.

### 세번변경이 되지 않는 부분품은 원산지확인서 받아야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제품은 많은 소요 원부자재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역을 살펴보면 작게는 몇 개에서 많게는 수천 개가 훌쩍 넘는



미소기준의 개념

- 역내산으로 원산지확인서 수취한 물품(역내산 인정)
- 역내산이지만 원산지확인서 미수취 물품(역내산 불인정)
- 역외산

원재료·부품이 역내산이라도 원산지확인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역내산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 미소기준을 활용하면 최종 제품에 대해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소기준은 부가가치의 10% 이내(협정마다 다름)로, 이 제품의 경우 미소기준을 적용해 최종 제품의 역내산 판정이 가능하다.

부분품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다.

물론 그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회사의 개수도 부분품의 개수만큼 될 것이다. 그 부분품 납품 업체 중에는 시설과 자본, 인력 등에서 여유가 있어 원산지확인서를 문제없이 작성하여 전달해 줄 수 있는 업체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원재료 납품업체는 도대체 ‘원산지확인서’가 무엇인지조차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일일이 완제품 생산자가 원재료 납품업체들을 다 교육시키기도 무척 힘들 것이기도 하거나와 이렇게 되면 FTA는 그냥 피곤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그 활용은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이 경우 완제품을 역내산으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원산지확인서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수십, 수백 또는 그 이상의 협력사로부터 모두 서류를 받는다는 것은 협력사에게 크나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뿐만 아니라 서류의 관리는 궁극적으로 부품을 납품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자가 하는 것이기에 완제품 생산자에게도 별로 좋을 것이 없다.

### 원산지확인서 수취가 불가능하다면 미소기준 활용

이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바로 미소기준이다. 미소기준이란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물품과 비원산지재료의 세번이 변경되지 못한 경우에, 당해 물품의 가격대비(협정에 따라 EXW 또는 FOB) 세번변경이 일어나지 않은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미미할 경우 세번변경을 인정해 주는 기준이다.

(참고로 섬유제품은 중량기준을, 농수산물은 가격기준과 6단위 세번변경기준의 조합을 채택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 규정이 없는 협정도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협정과 품목에 따라 면밀히 검토 후 적용하여야 한다.)

협정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 기준은 보통 판매가격의 10%이다. 실제로 유압브레이크는 모델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100여 개의 부분품이 들어가고, 품목번호는 완제품과 6자리가 보통 동일하게 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 제품이 세번변경기준을 통해 역내산 원산지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여지없이 납품받는 원재료·부분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를 모두 발급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기술한 바와 같이 부분품 등을 납품하는 쪽이나 납품받는 쪽이나 양자 모두에게 부담을 안겨줄 수 있으므로, 미소기준을 적용하면 이 중 10개 정도의 부품에 대해서는 원산지확인을 면제시킬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나머지 부분품에 대해서만 원산지확인서를 요청하여 받으면 되므로 그 부담은 대폭 감소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미소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부가가치 산정에 따른 가격 정보를 원산지증명서에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수많은 컨설팅을 해 본 결과 미소기준 적용은 극히 예외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협정별 미소 기준

구분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EFTA	미국	EU	터키	페루
가격 기준	일반 품목	8%	10%	10%	10%	10%	10%	10%	10%
	농수 산물	1류~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1류~14류 적용 제외. 15류~2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1류~14류 적용 제외	1류~2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일부 제외)			1류~14류 적용 제외
중량 기준	섬유	8%	8%	10%	7%	10%	7%	8~30% 일부 가격 기준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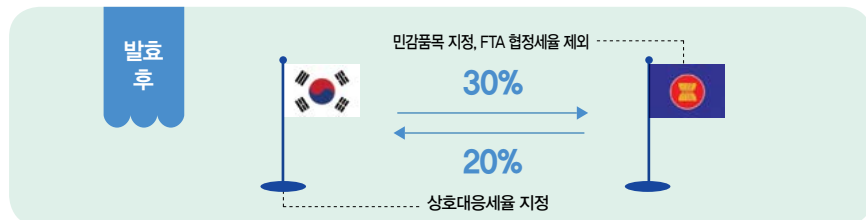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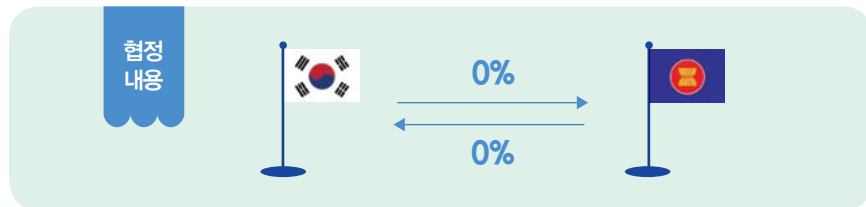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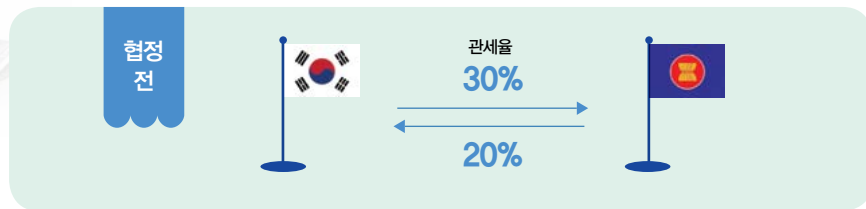
CC Change of Chapter(2단위 세번변경기준) CTH Change of Tariff Heading(4단위 세번변경기준) CTSH Change of Tariff Sub-Heading(6단위 세번변경기준)





## 실전 FTA 활용 노하우 – ‘상호대응세율’ 이해하기 한·아세안 FTA에만 있어... 아세안 수출 시 재확인해야

※상호대응세율이란?



한·아세안 FTA에서는 협정 상 관세철폐 품목이어도 해당 국가가 민감품목으로 지정하면 FTA 협정세율 면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 상대국도 해당 품목에 대해 FTA 협정세율을 면제할 수 있다. 상호대응세율제도는 한국이 맺은 FTA 중에서는 한·아세안 FTA에서만 존재하는데, 이는 경제발전 단계가 다른 10개국이 모인 아세안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상호대응세율제도는 협정상 양허 품목이라 하더라도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관세철폐를 하지 않을 경우 상대국도 동일 품목에 대해 양허 제의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쉽게 얘기하면 “상대국이 민감 품목으로 지정한 품목에 대해 우리만 양허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으므로 상대국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하겠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베트남은 승용차를 민감품목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한국도 이 4개국에서 수입되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율 0%가 아닌 일반관세율(MFN세율)인 8%를 적용하고 있다. 반대로 한국의 경우 단감을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하고 있어, 단감을 태국으로 수출할 때 FTA 특혜관세인 0%를 적용받지 않고 여전히 고율의 관세(45%)가 부과되고 있다.

### ‘협정 불이행’ 오해받을 여지도

한국이 맺은 FTA 중에서 상호대응세율제도는 한·아세안 FTA에만 도입되어 있다. 이는 발전 단계가 제각각인 개도국 10개가 모인 아세안의 특성 때문이다. 즉 최대한 개방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하되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국가에는 예외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다.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에 대해 총 69개 품목에

### 사례분석

상호대응세율 제외로  
무관세 적용받은 A사

HS코드 2007년 버전



HS코드 2012년 버전



A사 제품은 HS코드 2007년 버전에서는 0307.99로 상호대응세율 품목이었으나, 2012년 버전에서는 0307.89로 신규 지정되면서 상호대응세율 품목에서 제외돼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해졌다.

대한 상호대응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10개의 아세안 회원국은 총 526개(HS코드 6단위 기준)의 민감품목을 지정해 놓고 있다.

상호대응세율제도는 상대국이 민감품목을 자의로 지정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견제 장치로, 협정 당사국간에 민감품목군을 일치시켜 실질적으로 폭넓은 개방과 민감품목군의 관세인하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도입된 것이다.

현재 기관별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는 FTA 협정세율 정보제공 시 한·아세안 협정관세(기준세율 포함)만 제공하고 있는데, 상호대응세율제도를 모르는 수출업체는 FTA 협정관세를 곧 실행세율로 인식하게 된다. 그런데 상대국에서 협정관세보다 높은 세율을 부과하게 되면 FTA 관세양허 불이행으로 오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호대응세율제도는 장기적으로 축소 또는 철폐되어야 할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향후 한·아세안 FTA 추가개방 논의 시 추가자유화와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와 더불어 함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 세번 재지정으로 '민감품목'에서 제외된 사례

최근 상담을 의뢰한 A사는 훈제전복(전복을 쪄 후 훈제한 제품)로 HS코드는 0307.89)을 태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업체로, 한·아세

안 FTA 적용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A사에 따르면 훈제전복을 태국으로 수출할 경우 협정상으로는 무관세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태국 바이어는 관세 30%가 부과된다고 얘기했다는 것이다.

상담 결과 A사가 태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HS코드는 2007년 버전에서는 0307.99이었다. 해당 세번에는 전복을 비롯한 소라·피조개·바지락·세조개·해삼·개이지살 등 수생무척추동물(냉동·건조·염장·훈제)이 포함된다. 0307.99는 한국 측이 민감품목으로 지정해 특혜관세에서 제외된 품목으로, 태국에서는 상호대응세율제도에 의해 한·아세안 FTA 협정 세율인 0%가 아닌 일반세율(MFN) 30%를 적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5년마다 변경되는 HS코드의 2012년 버전에서 전복(냉동·건조·염장·훈제)만 별도의 HS코드인 0307.89로 신규 지정되었고, 전복을 제외한 나머지 수생무척추동물(냉동·건조·염장·훈제)은 0307.79와 0307.99로 지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훈제전복은 상호대응세율의 적용 대상에서 빠지게 되었으며, 따라서 해당 제품은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인 무관세로 태국으로 수출할 수 있었다.

상호대응세율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FTA무역종합지원센터 또는 각 지역 FTA활용지원센터나 관세청에 문의하면 된다.

## FTA 이슈 분석 – 미국의 수입 통관 제도

## 미국 납세신고서 27번 라인에 반드시 'KR' 기재해야

한·미 FTA 협정문에는 '원산지 검증'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 과정을 보면 미국 관세 관련 법령과 통관제도의 틀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통관제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리 우중국 기자

미국 세관의 수입통관 및 심사 절차



미국의 수입통관제도는 수입통관단계와 사후심사단계로 이뤄져 있다. 수입통관단계는 화물반입신고(Entry 제출)→납세 신고(Entry Summary) 단계로 이뤄져 있고, 사후심사단계는 사후세액심사(Post Entry Review)→정산(Liquidation) 단계로 이뤄져 있다.

### 01 화물반입신고 (Entry 제출)

'Entry'는 공식명칭이 Entry/Immediate Delivery(CBP Form 3461)로 우리나라의 화물반출입신고와 같은 성격이다. 화물이 미국에 도착하면 수입자는 도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화물 반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Entry 제출이라고 한다. 만일 15일 이내에 화물반입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세관장 명령을 발동해 세관창고로 화물을 강제로 옮긴 후 매각 또는 폐기절차에 들어간다.

CBP Form 3461에는 도착일자, 도착항구, Entry 넘버, 원산지국 등 총 28개 항목에 대해 부호 등으로 표시하여 신

고를 하게 된다. 그러나 Entry 단계에서 신고하는, 즉 CBP Form 3461에 기재하는 원산지국은 FTA 특혜관세 신청으로서 효력은 없다. 즉, 화물반입신고 단계에서 원산지국을 KR(Korea)로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납세신고 단계에서 신고하면 FTA 특혜관세 신청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FTA 특혜관세 신청을 할 화물이라면, Entry 단계에서도 원산지국을 KR(Korea, Republic of)로 신고하는 것이 좋다. 만약 이렇게 신고되지 않으면 FTA 특혜관세 신청을 하는 Entry Summary 단계에서 세관공무원에 의해 대비 검증되기 때문이다.

### 02 납세신고 (Entry summary)

화물반입신고(Entry 제출)를 한 자는 수입화물에 대해 화물 반출일로부터 10 근무일 이내에 납세신고(Entry Summary)를 해야 하며, 서식은 Entry Summary(CBP Form 7501)로 우리나라의 수입(납세)신고서와 같은 성격이

다. FTA 특혜관세 적용 신청은 이때 이뤄지기 때문에 원산지국을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납세신고서 서식은 Entry 넘버, 원산지국, 상품명세, 관세율, 관세, 비용(Fee) 등 총 43개 항목으로 부호, 숫자 등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특혜관세 신청은 'HTSUS No.(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S Number, 우리나라의 HS 번호)' 앞에 반드시 KR(Korea의 약어)을 붙여서 제출해야 한다. 만약 KR이 없으면 FTA 특혜관세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즉, Entry Summary 서식의 10번 'Country of Origin'란이나 14번 'Exporting Country'란에 KR로 표시했다라도 27번 라인에 KR로 표시하지 않았다면 FTA 특혜관세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가 된다.

FTA 특혜관세를 신청할 때 원산지증명서나 기타 이를 입증하는 서류 자체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대한민국 세관도 동일하다.

### 03 사후세액심사 (Post Entry Review)

통관단계에는 신고서 기재사항의 적합성 등 필요한 최소 사항만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의 방법으로 심사한다. 납부세액의 정확성과 통관적법성의 준수 여부 등은 통관 후에 사후심사를 통해 확인한다.

### 04 정산 (Liquidation)

세액의 정산 및 확정을 위한 단계이다. 정산(Liquidation)은 보통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0개월 또는 314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0일 이내에 재정산할 수 있다. 만약 세관에서 자체적으로 정산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면 CBP Form 4333A를 통해 수입자에게 통보하면 최장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정산 결과 세관에서 이상이 없다고 결정할 경우 이를 ACE(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에 등록해 수입화주가 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 세관의 정산 이전에 FTA 협정관세 적용이 잘못되었음을 수입자가 인지한 경우에는 사전에 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관세를 납부할 수 있다. 즉, 사후 납세신고 정정(PEA: Post Entry Amendment) 프로그램을 통해 정정된 납세신고서(Revised Entry summary)와 기존의 납세신고서(Entry Summary)를 함께 제출해 추가로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출처: 한국무역협회 FTA무역종합지원센터 '한·미 FTA 검증 대응 전략'

## 대응 가이드라인

▼ CBP Form 3461(Entry 제출) 상의 25번 원산지국에 KR 기재가 바람직하다.

CBP Form 3461(Entry 제출)의 25번 라인에 'KR'을 기재하는 것을 강조하고, CBP Form 7501(Entry Summary)의 27번 라인에 'KR'을 기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CBP Form 7501(Entry Summary) 상의 27번 Line No.에 KR 기재는 필수적이다.



알기 쉬운 FTA - FTA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

# 상품·서비스·투자 외에도 지재권·환경·노동·경쟁정책까지 포함해

흔히들 FTA라고 하면 상품무역 자유화만을 떠올린다. 그러나 FTA에는 상품 분야 외에도 서비스, 투자는 물론이고 지식재산권, 경쟁정책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내용들이 포함된다. FTA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글 이경희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01 상품

원산지 규정 및  
무역구제조치 규정



FTA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상품분야에는 공산품과 농산물에 대한 무역장벽 철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공산품과 달리 농산물은 민감한 품목이 많아서 무역자유화의 내용이 훨씬 복잡하다. 농업 경쟁력이 취약한 국가들은 민감한 농산물의 관세철폐 기간을 길게 잡거나 관세율쿼터(TRQ: Tariff Rate Quota) 등 수량제한을 둬으로써 해당 상품의 보호기간을 늘리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로 갑자기 수입이 늘어나서 국내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에 대비해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제도를 마련한다.

상품무역 분야에는 해당 상품이 역내 국가에서 만들어졌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이 포함된다. 역내산으로 인정될 경우에만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한 조항 가운데 하나이다. 원산지 규정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경우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무역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자국 섬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섬유제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을 까다롭게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 밖에도 상품분야에는 통관절차, 기술규정의 상호인정(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위생검역 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반덤핑, 상계조치 등의 규정을 포함한다.

## 02

### 서비스·투자

민감분야는 '유보'로  
유예조치 마련



**\* 상업적 주재:**  
서비스 거래의 한  
형태로 서비스 공급자가  
소비자의 국가에 자회사,  
합작투자회사, 지사  
등을 설립하거나 기존  
국내 기업을 인수하여  
현지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

서비스무역은 상품 무역처럼 유형의 물체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 의료, 유통 등 무형의 서비스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방 방식이 다르다. 상품 분야가 관세나 수량제한을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서비스 분야는 시장접근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서비스 무역자유화를 규정하는 방식으로는 크게 포지티브 방식(positive list)과 네거티브 방식(negative list)이 있다. 포지티브 방식은 시장접근이 가능한 분야만 나열하는 방식이다. 반면 네거티브 방식은 시장접근에 제한을 두고 있는 분야만 나열하는 방식으로 포지티브 방식에 비해 훨씬 개방적이다. 선진국이 체결하는 FTA는 대부분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한다.

네거티브 방식에서는 민감한 서비스에 대해 현재유보나 미래유보 등으로 자유화 유예조치를 마련한다. 현재유보는 FTA가 발효되더라도 규제를 풀지 않고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예를 들어 스크린쿼터는 한국영화와 외국영화를 차별하는 조치지만, 현재유보로 쿼터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미래유보는 현재유보보다 더 제한적인 조치로 FTA가 발효되더라도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규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예를 들면 공공서비스와 공교육 등은 정책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 미래유보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다. 서비스 무역은 현지 시장에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투자를 동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대다수의 FTA에서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공급의 규율을 투자분야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점점 더 투자분야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 03

### 규범 분야

선진국일수록  
지재권·환경·노동  
기준 높아



규범분야에서는 지식재산권, 환경, 노동, 경쟁정책 등의 각종 규범을 포함한다. 많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등 선진국은 모조품 등이 범람하는 개도국과 FTA를 체결할 때는 지식재산권 조항에 많은 신경을 쓴다. 일부 FTA에서는 환경, 노동 및 경쟁정책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환경·노동 규정은 주로 미국이 체결하는 FTA에 포함되는 경향이 있다. 엄격한 환경·노동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선진국의 기업들은 느슨한 규정을 적용하는 개도국 기업들에 비해 비용부담이 크다. 이를 그대로 둔다면 기업들이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생산시설을 옮기게 될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선진국은 FTA 체결 상대국의 노동이나 환경 기준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경쟁정책은 FTA 당사국이 반경쟁적 기업활동으로 인해 상품과 서비스 자유화의 이익이 감소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한다. 아무리 관세장벽을 낮춰도 국내 유통시장이 비경쟁적일 경우 관세인하 혜택이 일부 독과점 유통업체들에게 돌아가고 소비자들은 전혀 혜택을 볼 수 없게 되면 FTA의 필요성이 줄어들게 된다. 이 밖에도 FTA는 해당 협정의 운영조직에 관한 규정과 체결국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한다.

### FTA 효과 극대화하려면,

높은 수준의 FTA라야  
후생수준 높아

FTA의 체결 목적이 체약국간의 무역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후생수준을 높이는 것임을 감안할 때, FTA는 포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반적인 통상 환경이 균형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때 FTA의 혜택이 국민경제에 골고루 스며들 수 있고 기업이나 국민이 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지향한다.





## 산업통상자원부·한국무역협회, 첫 통상산업포럼 공동 개최 수출업계 목소리 수렴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

한국무역협회는 5월 23일 무역센터에서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제조업, 농수산업, 서비스업 등 산업계를 대표하는 포럼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통상산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새 정부의 통상부처에 바라는 업계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새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및 동아시아 지역의 FTA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한·중 FTA 등에 대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한국무역협회, 정밀화학산업진흥회 및 농업경영인증연합회가 발표하고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통상산업포럼 사무국인 한국무역협회는 “경제블록화 등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한·아세안 추가자유화 협상 추진을 통한 기체결 FTA의 내실화와 중남미, CIS 등 신흥국과의 FTA 신규 추진을 통해 통상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포스코는 “중국의 경쟁적 설비 증설로 인한 공급 과잉 상태에 따른 한국의 대중 철강 무역적자 확대 등을 고려해 한·중 FTA 추진 시 철강제품에 대한 중국 측 관세 철폐와 합리적인 철강 원산지기준을 채택해 주길 바란다”고 건의했으며, 정밀화학산업진흥회는 “중국에 대해 꾸준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중이지만 강제인증제도(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로 인해 수출과 판매에 어려움이 많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한국농업경영인증연합회는 한·중 FTA 추진시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산물의 양허 제의를 요청했다.

통상산업포럼은 제조업·농수산업·서비스업 등 업계를 대표하는 업종별 협회장들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된 민간 협의체로서, 통상정책 및 교섭 추진 과정에서 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 운영된다. 포럼의 공동위원장을 맡은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통상산업포럼을 통해 통상교섭 전 과정에서 민간 협업과 소통이 대폭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농업·중소기업 등 취약분야의 민감성을 반영하고 국내 보완대책과 연계하여 산업계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FTA를 추진하겠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통상산업포럼은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9월과 12월에 2, 3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경기북서부 지역, FTA 활용 활성화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경기도청·경기북서부FTA활용지원센터·고양상공회의소는 5월 9일 고양상공회의소에서 지역 내 9개 중소기업을 초청해 ‘FTA 활용 활성화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수출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FTA 활용 애로요인을 들어보고,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경기도에 위치한 수출업체 KKDC의 이주희 대리는 “유관기관들이 서비스 응대는 잘 해 주는데, FTA 포털 사이트 등에서 문의한 내용과 다른 경우가 있다. 실무를 처음 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다”고 하자 손진천 의정부세관 제장은 “상당해주는 입장에서도 잘 모르는 경우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후 알려주고 있지만, 상담자 입장에서는 즉답이 나오지 않은 데 불만족하는 경우도 있다. 공무원들도 사람인지라 서로 조금씩 양해를 구하고 함께 해법을 찾는다고 봐주면 좋을 듯하다”고 답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몽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실 국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기업들의 좋은 얘기 고맙다. 정부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기업들도 노력해서 더 많은 질문과 답을 구하면서 실력을 키웠으면 좋겠다. 수시로 생각나는 의문이나 제안은 상공회의소, 세관, FTA활용지원센터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 FTA 협상 소식



### RCEP 제1차 협상 개최

RCEP 제1차 공식협상이 5월 9~13일 브루나이의 수도인 반다르 세리 베가완(Bandar Seri Begawan) 소재 국제회의장(CC)에서 개최됐다. RCEP 협상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16개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ASEAN 10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RCEP 무역협상위원회(TNC)의 운영과 관련한 규칙에 합의하는 한편, 상품·서비스·투자 작업반 첫 회의를 개최하고 분야별로 향후 작업방식 및 계획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참여국들은 작업반이 설립된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를 집중 논의하였으며, 지재권, 경쟁 등의 주요 분야에 대한 각국별 입장을 확인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RCEP 제2차 공식협상은 금년 9월 23~27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한·베트남 FTA 제2차 협상 개최

한·베트남 FTA 제2차 협상이 5월 22~24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됐다. 우리 측은 최동규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관세청 등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베트남 측은 부 휘 손(Bui Huy Son) 산업무역부 아태시장접근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산업무역부, 외교부 등 관계관이 참석했다. 이번 제2차 협상에서 양국은 기존에 합의한 한·인도네시아 FTA 협상 운영체제(TOR: Terms of Reference)를 바탕으로 상품, 원산지·통관, 서비스, 투자 등 협정문에 대한 논의를 개시했다. 베트남은 아세안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와 아세안 간에는 한·아세안 FTA가 이미 발효되어 있으나, 한·베트남 간 양자 FTA로 양국 간 경제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인도네시아 CEPA 제3차 협상 개최

한·인도네시아 CEPA 제3차 협상이 5월 29~31일 부산에서 개최됐다. 우리 측은 김영무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관세청 등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고, 인도네시아 측은 사할라 룬반 가울(Sahala Lumban Gao) 공기업부 장관 전문자문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제3차 협상에서 양국은 기존에 합의한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 운영체제를 바탕으로 상품, 원산지, 통관, 서비스, 투자 등 분야별 협상을 진행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의 주요 교역·투자 대상국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력이 활발히 추진 중이다. 한·인도네시아 CEPA 체결 시 양국 간 원·원 산업협력 모델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할리우드 스타들의 잇따른 한국 방문으로 한국 영화 시장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영화뿐만 아니라 공산품에서도 한국 시장은 우수한 글로벌 기업들의 중요한 무대다. 이는 시장의 힘이 양만이 아니라 질로도 이뤄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소비자 파워는 여러 나라들이 한국과 FTA를 맺고 싶어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글 이현주 기자 사진 각 영화 수입사

할리우드의 이유 있는 한국 사랑

## 한국, 작지만 강한 시장...세계가 주목



지난 4월은 한국 영화팬들에게는 잊지 못할 시간이었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아이언맨 3(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끈 마블 코믹스의 만화 '아이언맨' 시리즈를 영화화 한 작품)'가 4월 25일 한국에서 전 세계 최초로 개봉됐기 때문이다. 주인공 역을 맡은 할리우드 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프로모션 차 처음 방문한 곳도 한국이었다. 4월 4일 기자회견에서 그는 “지금까지 아이언맨 시리즈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한국 시장”이라고 강조하고 “개봉을 앞두고 월드투어를 시작할 때 관계자들에게 내가 먼저 서울로 오겠다고 요청했다”며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한국 관객에 대한 기대는 틀리지 않았다. 아이언맨3는 개봉 첫 주말 극장가를 싹쓸이했다. 주말 이틀간 무려 171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고, 예매 관객 수 31만 명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개봉 이후 현재(5월 26일)까지 누적관객수 863만 7,962명을 기

록하고 있다. 이는 2009년 개봉한 아바타(1,362만 명)에 이은 외화 흥행 순위 2위의 기록이다.

### 한국의 티켓파워 갈수록 커져

아이언맨3가 전 세계 최대 영화 시장인 미국보다 1주일 앞서 한국에서 최초로 개봉된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아이언맨 시리즈는 한국에서 1편은 430만 명, 2편은 440만 명을 각각 동원했다. 이례적인 흥행 성공에 마블 코믹스는 한국 영화 시장의 티켓 파워에 주목했고 아이언맨3의 한국 최초 개봉을 결정했다.

5월 7일에는 세계적인 영화 배우 윌 스미스가 아들 제이든 스미스와 함께 영화 '애프터 어스' 프로모션을 위해 방한했다. 윌 스미스는 꼭 1년 전인 2012년 5월 7일 영화 '맨 인 블랙 3' 홍보를 위해 내한한 적이 있다. 그는 인터뷰에서 “5월 7일을 국경일로 만들어 준다면 매년 이 날짜에 맞춰 방한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윌 스미스 역시 한국

### more than movies

#### 한국에 처음 온 유명 영화인은?

한국을 처음 방문한 유명 영화인은 조세프 본 스텐버그 감독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 출신 감독인 그는 '푸른천사(1930년)' '상하이 익스프레스(1932)' 등의 영화로 유명하다. 1936년 9월 13일에 방한한 것으로 기록돼 있는데, 일본만 가려고 했다가 우연찮게 오게 됐다고 한다.

1954년 당대 최고의 스타였던 마릴린 먼로가 한국을 방문한 것도 일본으로 실패 여행 가는 길에 잠깐, 그마저도 영화 홍보가 아닌 주한미군 공연 차 잠깐 들렀던 것이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영화 홍보 차 한국에 오는 할리우드 배우는 극히 드물었다.

할리우드가 한국 시장을 주목하게 된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다. 1989년 12월 나스타사 킨스키가 영화 '막달리나' 홍보차 일주일 동안 체류하며 프로모션 활동을 펼쳤고 1994년에는 톰 크루즈가 방한해 영화 '뱀파이어와의 인터뷰'를 홍보했다.

그 후 부산국제영화제로 한국이 아시아 영화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김기덕, 박찬욱 등 한국 출신 감독들이 국제 무대에서 선전하며 한국영화뿐만 아니라 영화 시장 자체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졌다. 이제 한국은 할리우드에게 '일본 가는 길에 들르는 기착지'가 아니라 '목적지'로 점차 인식되고 있다.

영화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윌 스미스는 “한국 영화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중요한 시장”이라고 설명하며 “한국에서 영화가 흥행한다면 싸이와 음반을 내겠다”고 공약을 내걸어 기자회견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 글로벌 기업들, '한국에서 지면 안 된다'

많은 할리우드 영화들이 한국 프로모션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한국 영화 시장이 급격히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관객 수는 2011년보다 20% 이상 늘어난 1억 9,489만 명을 기록, 매출 역시 큰 성장세를 보이며 1조5,000억 원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다. 2013년 1분기 매출도 4,063억 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900억 원 가량 증가하는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한국 시장이 흥행의 바로미터라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단기간에 관객이 빨리 몰리는 한국 영화 시장 특성은 흥행 여부를 테스트하기에 적합하다. 또 관객의 성향이 까다로워 다른 국가들처럼 할리우드에서 만든 영화라고 해서 플러스 점수를 받고 시작하지 않는다. 지난 5월 13일 영화 '분노의 질주' 홍보차 방한한 액션 배우 빈 디젤이 “자국 영화가 50%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 시장에서 우리의 영화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졌다”라고 말한 것은 이 점을 보여준다.

이처럼 한국이 인구가 많은 나라들보다 티켓파워를 발휘하는 이유는 시장의 중요성이 양(量)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 소비자의 간간함과 높은 안목은 웬만한 상품으로는 공략하기 힘들고, 한국에서의 성공은 곧 세계시장의 성공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시장의 질(質)적 성숙도는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하고, 이는 곧 많은 나라들이 한국과 FTA를 맺고 싶어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FTA 협상은 초대받는 자가 유리한 게임이다. 한국의 소비자 파워는 한국이 FTA 체결 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E]



## ‘함께하는 FTA’ 창간 1주년 기념 독자 이벤트

## 애독자들의 FTA 사연을 공모합니다

‘함께하는 FTA’가 창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함께하는 FTA’는 FTA 최신 동향과 전략, FTA 지식 및 활용 노하우를 제공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FTA 활용을 지원하는 정부 및 유관기관, 그리고 FTA 활용의 최전선에 있는 수출기업들과 국민들의 성원 덕분이었습니다.

이에 ‘함께하는 FTA’는 독자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FTA 사연을 공모합니다. 보내 주신 사연 중 채택되신 분들의 글은 ‘함께하는 FTA’의 지면을 통해 소개되며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FTA와 함께한 당신의 1년, 그간의 스토리를 기대하겠습니다.

## 애독자 FTA 사연 공모 개요

- **주제** FTA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체적인 소재는 자유
- **분량** 원고지 10매(띄어쓰기 포함 2,000자)
- **마감** 6월 24일(월요일) 오후 6시
- **보내실 곳** xyz@kbizweek.com(이메일로만 접수, 이메일 문의 가능)
- **주의사항** 이메일 발송 시 제목에 [FTA 애독자 사연]을 적어 주십시오.  
원고는 이메일 본문에 적거나 파일을 첨부하는 것 모두 무방합니다.  
이름, 연락처, 주소를 꼭 기재해 주십시오.

※ 당선작에 한해 ‘함께하는 FTA’에 게재되며, 게재 시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타 매체 중복 게재를 방지하기 위해 게재된 글에 한해서는 ‘함께하는 FTA’가 저작권을 공유함을 알려 드립니다.



Reader's Letters

## 독자의 소리



“중소기업 천하의 청해물산 기사를 통해, 발상의 전환이라는 중요한 경제원리를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FTA의 피해산업으로 여겨지는 농수산업이라도 품질에 대한 경쟁력을 앞세워 관세가 인하된 해외 시장의 문을 적극적으로 두드리면, 성공하는 농수산기업이 많아지리라 기대합니다.”  
이춘임(경기도 포천시 수출업)

“함께하는 FTA’를 읽어보니 FTA에 관한 막연한 불안감이 조금은 해소된 것 같아요. FTA의 긍정적 효과를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서 좋았구요. 또한 한·터키 FTA 내용을 읽으면서 FTA를 통해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이 기대돼요.”  
우승규(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함께하는 FTA’를 읽으면서 그간 제가 세계 무역에 대해 가졌던 부정적인 시각이 우물 안 개구리의 시선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는 긍정적으로 더 넓게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FTA 유망 직업’을 통해 FTA와 관련된 다양한 직종과 업무를 알게 되어 매우 유익했습니다.”  
이소민(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도전!  
FTA퀴즈미국이 적극 추진 중인  
다자 FTA는 무엇인가?

다음 문장을 읽고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답을 넣으세요.  
이번 호를 열심히 읽었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 1 세번변경기준을 통해 역내산 판정을 받고자 할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의 8~10% 이내(협정·품목에 따라 다름)에 한해 역외산을 허용하는 것을 □□□□ 이라고 한다. (난이도★)
- 2 한국과 중국은 현재 양자 및 다자간을 포함해 3개의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중 FTA, 한·중·일 FTA, 그리고 □□□□ 이 그것이다. 빈 칸에 들어갈 알파벳 약어는 무엇인가? (난이도★★)
- 3 현재 한국은 10개의 회원국으로 이뤄진 아세안과 FTA를 맺고 있지만, 아세안 회원국 중 □□□□□, □□□□ 과는 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위해 별도의 FTA 협상을 각각 진행하고 있다. (난이도★★★)
- 4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2기를 맞아 2013년 연두교서에서 범대서양 동반자협정(□□□□)과 환태평양동반자협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빈 칸 안에 들어갈 알파벳 약어를 각각 써 넣으시오. (난이도★★★★)
- 5 한국이 맺은 FTA 중에서는 한·아세안 FTA에만 있는 제도로, FTA 협정 상 관세 양허 대상이더라도 한 국가가 민감품목으로 지정해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국도 똑같이 특혜관세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 제도라고 한다. (난이도★★★★★)

## 당신의 FQ(FTA 지수)는?

- 0개 조금 더 공부하셔야겠군요.
- 1~2개 이제 FTA에 흥미를 느끼고 계시군요.
- 3~4개 제법이시군요. 상당한 수준입니다.
- 5개 당신은 이미 FTA 전문가!





무역통계 정보 서비스의 메카!


# 무역통계 포털 서비스

한국무역협회가 제공하는 한국을 포함한 미국, 일본, 중국, EU, 인도, 아세안 등의 무역통계를 연월별, 품목별, 국가별 등으로 다양하게 분석하여 제공하는 국내 최대의 무역통계 정보서비스



[www.kita.net](http://www.kita.net)

21세기 한국무역의 길잡이인 한국무역협회가 무역인들에게 제공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포털

 한국무역협회

135-729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1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504호

TEL. 1566-5114